

성 과 관 리 전 략 계 획

(2022~2026년도)

2022. 8.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2.8.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2-523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9, 9동 국가보훈처

목 차

I .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5
II . 일반현황 및 계획 개요	10
1. 국가보훈처 일반현황	10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14
III . 세부 추진계획	16
1. 전략목표 I	16
2. 전략목표 II	28
3. 전략목표 III	41
4. 전략목표 IV	57
5. 전략목표 V	71
6. 전략목표 VI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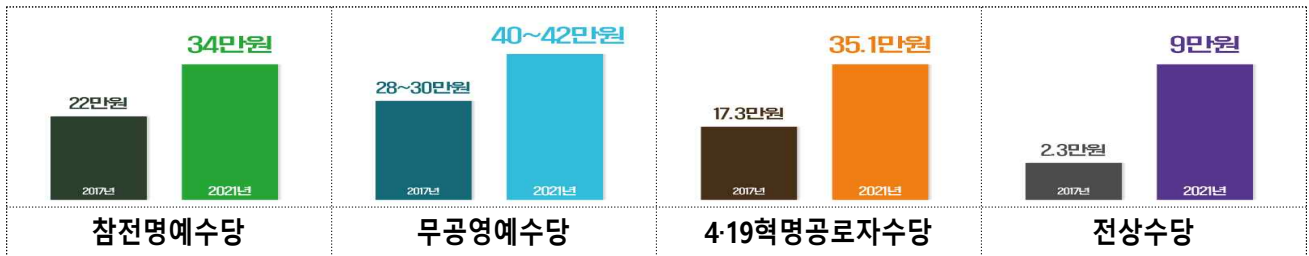
1. 그간의 정책성과

①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 보상금 및 수당 인상

- (보훈급여금 인상) 참전·전상수당 등 개별 수당을 희생과 공헌 수준에 합당하도록 대폭 인상

* 기본 보훈보상금은 연평균 4.1% 인상



-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확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대상 생활지원금 지급('18.1월 신설, 20,728명 수혜)

* 생활이 어려운 후손이면 모두 국가가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19.5월, 국민일보)

□ 요건 인정기준 및 보훈심사체계 개선

- (요건인정기준 개선) 부처간 달리 규정하던 '전상·전몰' 기준 정비, 군복무 중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된 의무복무자에 대한 기준 완화

*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제한된 복무환경 등 의무복무자의 특수성을 종합 고려

- (국민 눈높이 보훈심사) 입증자료 없는 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 청문 등 사실조사 활성화, 시민참여제도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 반영

* 사실조사 건수 : '18년 466건 → '21년 900건

- (전역 前 등록신청) 부상 입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등록 가능토록 개선하여 각종 보상의 공백 방지

② 맞춤형 의료·복지

□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 (보훈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인천병원('18.11월), 원주요양원('20.12월), 광주병원 재활센터('21.12월), 전주요양원('22.4월), 부산병원 재활센터('22.5월) 개원



- (위탁병원 확대) 고령 참전유공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소외지역·노인성 질환 등 중심으로 위탁병원 208개소 확충(310→518개소)
- (의료비 부담 완화)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을 확대(60→90%),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감면 진료기관을 보훈병원에서 위탁병원까지 확대

□ 더 높은 수준의 보훈복지 실현

- (맞춤형 재활서비스) 상이군경 등 재활을 위한 스마트 보철구 시범 공급 및 국가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신설(상담 및 전문 치유프로그램 운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스마트 보철구 연구·개발 추진('21.1.28. 업무협약 체결)
- (재가복지서비스)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대상 확대,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160% 이하로 완화
 - * PTSD, CRPS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천안함 생존장병 특별 지원('21.5월)
- (교통시설 이용편의 개선) 고속·시외버스 할인 승차권 온라인 예매 앱('21.6월) 및 국내 여객선 온라인 승선이용권 조회서비스 개발·시행('21.12월)



3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사망시 예우 강화

□ 안장능력 확충 및 관리 강화

- (안장능력 확충)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권역별 확충(9.1만기)
 - 신규조성 : 괴산호국원('19.10월), 제주호국원('21.12월)
 - 기존묘지 확충 : 임실호국원 제2충령당('17.7월), 대전현충원 충혼당('21.5월)



* 국내 최대 독립운동가 묘역인 대구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18.5월)

- (국가관리묘역) 서울수유, 안성사곡, 거제장승포 등 7개소를 지정하여 묘역정비 및 안내판 설치 등 국립묘지 수준으로 상시 관리

□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 강화

- (장례 의전 격상)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근조기 및 영구용 태극기, 고인의 참전사실 등을 담은 공적카드 증정
 - 애국지사,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조화 근정, 경찰 에스코트 지원 등 예우 강화



- (생계곤란 유공자 장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인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인력 및 물품 등 지원(200만원 상당, 총 2,903명 지원)
- (국립호국원 의전단 신설) 유족 안내, 유골함 호위 및 봉송, 개별 묘소 참배시 진혼곡 연주 등 품격있는 안장 및 참배 지원

4 독립 · 호국 · 민주 정신 기억, 확산

□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및 유해 봉환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독립운동 사료 대대적 수집 및 공적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 특히 여성 독립유공자는 '17년까지 전체 포상인원의 2%인 299명에 불과하였으나, '18년 기준 개선 이후 '21년까지 245명 포상
-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카자흐스탄 현지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등 최고의 예우로 봉환하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 * 국민추모기간 중 대전현충원 3,204명 참배, 온라인 추모 63,842회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 정부 주도로 통일된 디자인의 명패 제작, 사회 각계각층 참여를 통해 국가유공자 자긍심 제고 및 희생과 공헌을 이웃이 함께 기리는 사회 분위기 조성
 - * '18~'21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45만여 명에게 증정 완료



□ 체험중심의 창의적인 보훈정신 계승사업 확대

-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교육현장 맞춤형 보훈선양 학습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 (보훈정신 계승 연수·체험활동 참여인원) '19년 299천명→'20년 235천명→'21년 310천명
 - * 어린이 보훈 잡지 발간 및 고등학교 보훈 교과서 학교수업 활용, 청소년 온라인 교재 개발 등

□ 정부기념일 지정 및 특별주기 기념사업 추진

- (정부기념일 지정) 6·10독립만세운동, 대구 2·28민주운동 및 대전 3·8민주의거 등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념일을 정부기념일로 격상
- (특별주기 기념사업)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 * △독립의 횃불 릴레이('19.3.1.~4.11.) : 2,019명 국민 주자 등 3만여 명 참여
 -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배지 캠페인('20.6월) : 유골함을 감싼 태극기를 모티브로 제작
 - △상록수 2020 뮤직비디오('20.4.19.) : 4·19정신으로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

○ 국가가 입증하는 심사체계 도입

- (입증부담 완화)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나 직접적인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은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포괄적으로 인정

*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 영향으로 발생한 희귀암, 의무복무자의 자해사망 등

- (심사기준 개선) 역학조사 등을 통해 PTSD·이명의 과학적 심사기준 정립
- (사실조사 확대) 국가 주도 사실조사를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
- * 사실조사 대상과 범위 및 현장조사권 등 법제화, 지원체계 강화 추진

○ 실질적인 희생 수준을 반영한 상이등급체계 개선

- (신체적·사회적 제약 반영) 실질적인 불편정도를 상이등급 기준에 적극 반영하고, 상이처가 다수 있으면 기존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
- (7급 기준 개선) 보훈대상자의 진입 장벽이 되는 최저등급(7급) 기준을 균형 있게 완화

○ 등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 (신체검사) 보훈병원 신검 전담의 확충 및 신체검사 대체 절차*를 도입하여 상이등급 판정 절차 효율화

* 민간 병원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진단서」 도입

- (보훈심사) 심사지원인력 확충, 전자심의제 확대 등 보훈심사회의의 운영 간소화로 심사 기간 단축 추진

○ 보훈대상자 유형별 보상 격차 대폭 개선

-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

- 국내외 유사 급여 수준, 삶의 질 등을 고려한 객관적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뒤쳐진 보훈급여를 합리적으로 인상

* 상이7급 보상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

-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원 시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방안 마련

○ 보훈 외 복지정책과의 정합도 제고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 공제
- 일반복지와 연계하여 각종 수당 등을 조정하고 보훈대상자에게 일반 국민보다 높은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

○ 보훈특별고용제도(고용명령) 개편 및 직업훈련 강화 추진

- 기업의 경영 여건과 보훈대상자의 실질적 고용 향상을 고려하여 의무고용 대상과 비율 조정 등 개편 방안 마련
- 기업의 구인 수요와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으로 보훈 대상자의 자립 역량 확보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 강화

○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보훈병원으로 활용
-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위탁병원 대폭 확대
-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위탁병원 연령 제한 폐지

○ 보훈가족 마음건강을 위한 권역별 「보훈트라우마센터」 설립

- 국가유공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의학적 치료 필요 시 보훈병원 또는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 강화**

- (안장능력) 연천현충원 5만기 조성 및 기존 국립묘지 12.8만기 확충('25.),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 추진

- (국립묘지 외) 사설묘지 등 안장 지원 및 합동묘역 등 관리 강화

* 묘소 단장비 및 봉안시설 사용료 등으로 지원 확대, 국가유공자 합동묘역과 후손이
없는 전몰군경묘소 등의 국가 관리 강화

□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 (중·장기복무)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감안하여 조정

○ (단기복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5년 미만 단기복무한 장교·부사관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방안 마련

○ (지원체계) 지역 기반 서비스를 위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확충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노동부)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역량 강화

②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 의무복무자의 사회적 존중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대군인법의 지원 대상에 의무복무자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병역의무 이행에 보답해야 하는 폭넓은 책무 부여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

- 민간주택 청약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 실질적 배려방안 추진

- 군 복무 학점인정제(국방부·교육부),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국방부, 복지부)
등 도입 추진

□ 보훈문화 기반 조성·확산 및 보훈외교 강화

-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
 - 문화콘텐츠와 접목한 보훈정신 계승 사업, 청소년과 교원 중심의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보훈 통합 아카이브」 조성
- 범국민적·국제적인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23)
 -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참전국·국제기구 정상을 초청하여 「정전 70주년 기념식」('23. 7. 27.) 거행
 - UN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추모를 전하면서 문화·산업·학문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국내외 행사 개최
- 미국 등 참전국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미래세대와의 교류 확대
 - 유엔사 근무장병 재방한 초청 대폭 확대
 - 참전용사 후손사업 확대,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 국민 안전에 헌신하는 제복근무자 예우 문화 조성
 - 경찰·소방관을 포함한 제복근무자(MIU / Men in Uniform)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 장기간 국민 안전에 헌신한 경찰·소방관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트라우마 치유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 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 추진('25)
 - 국민통합의 축제로 3·1절, 광복절 행사 및 다양한 선양사업 시행

- 애국의 역사를 보존하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독립운동 기념시설 건립 및 관리 강화
- 광복 100주년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 프로젝트 기획·추진

○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

- 신진 연구인력 양성 및 민간 연구지원 확대로 연구 생태계 활성화
- 국내외 유관 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및 독립운동사 연구의 컨트롤 타워 기능 정립

○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안정 지원 강화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및 영주귀국정착금 인상 추진
- 주택·사업 등 정착에 필요한 실수요를 고려하여 영주귀국후손 종합 지원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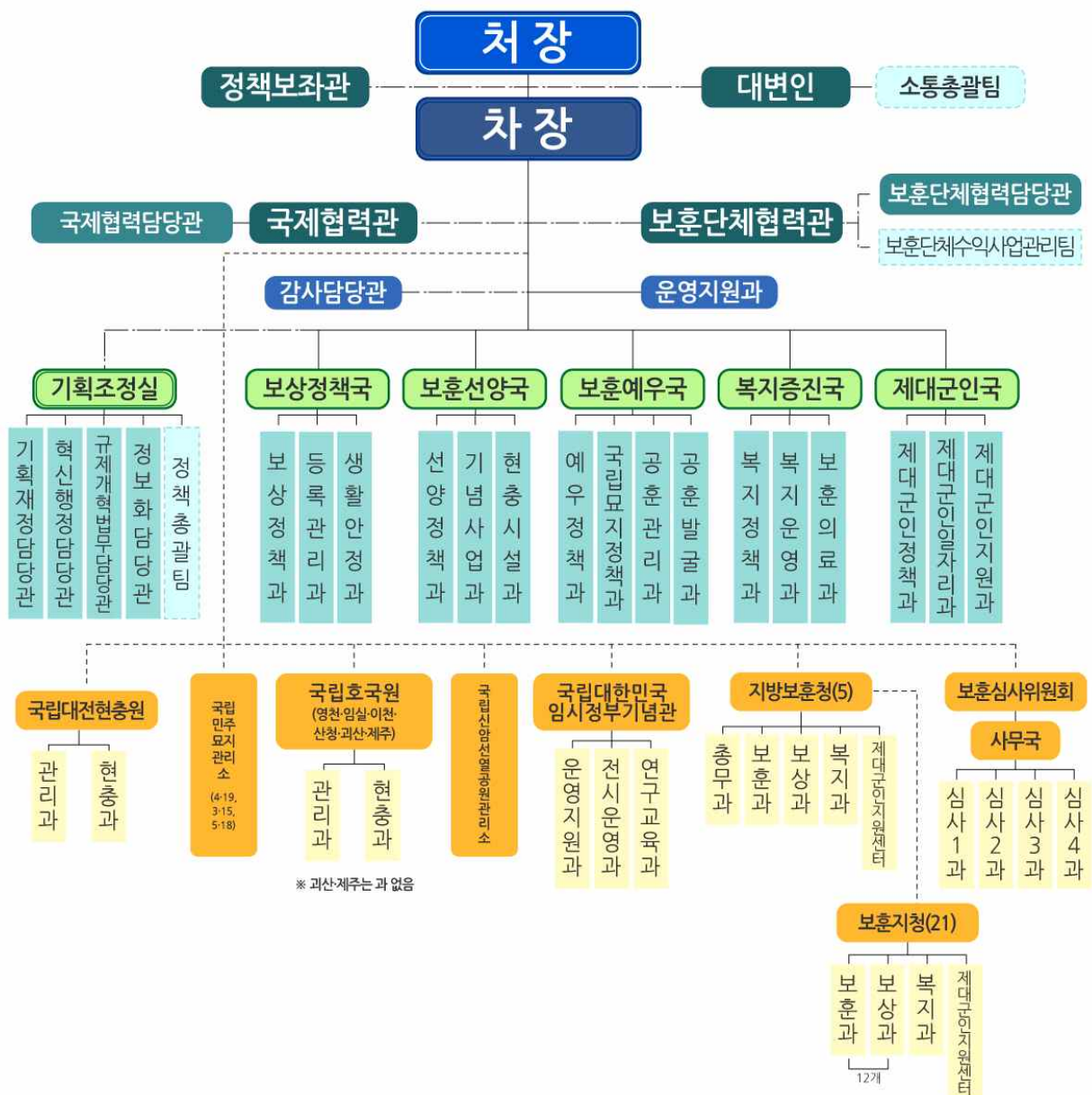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국가보훈처 일반 현황

(1) 조직

- 본부 : 1실 5국 4관, 17과 7담당관, 3팀
- 소속 : 1차 18개(지방보훈청5, 국립묘지11, 보훈심사위원회, 임시정부기념관),
2차 21개(보훈지청)



(2) 인원

○ 총 1,427명(본부 320명 / 소속기관 1,107명) * 한시정원 1명(5급)^{본부 포함}

구분	계	정무	별정	고공단	3.4급	4급	4.5~5급	6급 이하	연구직	전문 경력관
계	1,427	2	1	21	7	54	206	1,113	16	7
본부	320	2	1	9	5	20	96	186	-	1
소속	1,107	-	-	12	2	34	110	927	16	6
보훈심사위원회	58	-	-	5	2	2	10	35	-	4
지방보훈관서	888	-	-	5	-	21	77	780	5	-
대전현충원	65	-	-	1	-	-	7	55	-	2
민주묘지	14	-	-	-	-	2	3	9	-	-
호국원	55	-	-	-	-	6	10	39	-	-
공원관리소	3	-	-	-	-	-	1	2	-	-
임정기념관	24	-	-	1	-	3	2	7	11	-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1	'22	'23	'24	'25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58,016	58,752	60,846	62,616	63,112
(전년대비증가율, %)		(1.3%)	(3.6%)	(2.9)	(0.8)
○ 총계	60,634	65,634	68,759	71,383	71,280
(전년대비증가율, %)		(8.2%)	(4.8%)	(3.8%)	(△0.1%)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877	935	1,000	1,070	1,145
(전년대비증가율, %)		(6.6%)	(7.0%)	(7.0%)	(7.0%)
○ 기본경비	113	125	126	129	133
(전년대비증가율, %)		(10.6%)	(0.8%)	(2.4%)	(3.1%)
○ 주요사업비	57,026	57,692	59,720	61,417	61,834
(전년대비증가율, %)		(1.2%)	(3.5%)	(2.8%)	(0.7%)
□ 예산					
○ (총)지출	55,668	56,544	58,526	58,723	59,291
(전년대비증가율, %)		(1.6%)	(3.5%)	(0.3%)	(1.0%)
○ 총계	56,476	57,433	59,455	51,196	61,809
(전년대비증가율, %)		(1.7%)	(3.5%)	(△13.9%)	(20.7%)
【일반회계】					
○ (총)지출	55,493	56,352	58,334	58,530	59,113
(전년대비증가율, %)		(1.5%)	(3.5%)	(0.3%)	(1.0%)
○ 총계	56,302	57,240	59,263	61,003	61,631
(전년대비증가율, %)		(1.7%)	(3.5%)	(2.9%)	(1.0%)

구 분	'21	'22	'23	'24	'25
【에특회계】					
○ (총)지출	153	170	169	169	154
(전년대비증가율, %)		(11.1%)	(△0.6%)	(-)	(△8.9%)
○ 총계	153	170	169	169	154
(전년대비증가율, %)		(11.1%)	(△0.6%)	(-)	(△8.9%)
【균특회계】					
○ (총)지출	21	22	23	24	24
(전년대비증가율, %)		(4.8%)	(4.5%)	(4.3%)	(-)
○ 총계	21	22	23	24	24
(전년대비증가율, %)		(4.8%)	(4.5%)	(4.3%)	(-)
□ 기금					
○ (총)지출	2,349	2,208	2,320	2,393	2,321
(전년대비증가율, %)		(△6.0%)	(5.1%)	(3.1%)	(△3.0%)
○ 총계	4,158	8,201	9,304	10,188	9,471
(전년대비증가율, %)		(97.2%)	(13.4%)	(9.5%)	(△7.0%)
【보훈기금】					
○ (총)지출	1,401	1,254	1,326	1,356	1,238
(전년대비증가율, %)		(△10.5%)	(5.7%)	(2.3%)	(△8.7%)
○ 총계	3,210	6,823	7,875	8,704	7,930
(전년대비증가율, %)		(112.6%)	(15.4%)	(10.5%)	(△8.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총)지출	948	953	994	1,038	1,083
(전년대비증가율, %)		(0.5%)	(4.3%)	(4.4%)	(4.3%)
○ 총계	948	1,378	1,429	1,484	1,541
(전년대비증가율, %)		(45.4%)	(3.7%)	(3.8%)	(3.8%)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1) 전략계획의 주요 특성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의 새로운 국정 비전·목표 및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임무·비전 설정
- (임무)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
 -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국가보훈의 목적(국가보훈기본법 제1조)을 반영
- (비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 국가유공자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미래상 제시

□ 임무와 비전을 실천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6대 전략목표 설정

전 략 목 표	I.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II.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III.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IV.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V.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한다.
	VI. 정책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지원체계를 강화한다.

(2)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 국가보훈처 임무 - 비전 - 전략목표 - 성과목표

임무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

비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전략목표

I.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II.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III.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IV.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한다.

V.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한다.

VI. 정책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성과목표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2.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1.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2. 국가유공자의 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1.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안장 지원 등 예우 체계를 강화한다.
2.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1. 현충시설 활성화와 보훈단체 선양활동을 통하여 보훈 문화를 확산한다.
2. 국민참여 보훈체험을 통해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1.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2. 참전기념사업 활성화 및 UN참전국 교류협력 강화로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한다.

1.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한다.
2. 대·내외 소통과 협력으로 보훈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전략목표 I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기 본 방 향

◇ 성과목표

- 성과목표 1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 성과목표 2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 그간의 성과

- 보상금 인상 등 보상강화로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 * 보상금 '22년 5%인상, 참전명예수당 '17년(22만원) 대비 '22년(35만원)
- 보훈수혜자 중심의 적극적 보훈심사로 적기 보상 및 예우 추진
 - 사실조사 확대 및 방법 다양화로 신청인의 입증부담 완화
 - ▶ 사실조사 실시 : ('20년) 818건 → ('21년) 991건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수강료 지원 확대 등 취업역량 개발 지원
 - * 21년 기준 12만명 취업중이며, 63%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 근무
-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대부제도 개선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 임무와 전략목표간 상관성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생활안정 기반인 취업, 대부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

(1)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실시

- 보훈대상별 합리적인 보상지원으로 공정성 제고
- 공정하고 정확한 등록심사 체계 개선으로 국가 책임성 강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업·대부 지원

- 국가유공자 고령화 및 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감소 등 시대·환경 변화에 맞춘 취업지원 제도 개선
- 대부이용에 차별·소외계층이 없도록 접근성·편의성 제고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공정·보훈 실현을 위한 보상체계 제도개선 건수(건)					신규	9	· 공정한 보훈 실현(국정과제)을 위한 보상정책국 소관(보상, 등록, 생활안정지원) 법령, 행정규칙, 지침 개정건수 *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되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요소인 법령 등 개정건수를 지표로 산정 <목표> <table><tr><td>구분</td><td>2021</td><td>2022</td><td>2023</td></tr><tr><td>실적</td><td>신규</td><td>7건</td><td>7건</td></tr><tr><td>구분</td><td>2024</td><td>2025</td><td>2026</td></tr><tr><td>실적</td><td>8건</td><td>8건</td><td>9건</td></tr></table>	구분	2021	2022	2023	실적	신규	7건	7건	구분	2024	2025	2026	실적	8건	8건	9건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개정건수 * 개정 내용별 건수 산정 * 정부입법은 국회제출 기준, 의원입법은 본회의 통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나라 문서
구분	2021	2022	2023																						
실적	신규	7건	7건																						
구분	2024	2025	2026																						
실적	8건	8건	9건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1	'22	'23	'24
I-1. 보훈급여금 수준 인상률(%)	3.0	5.0	3.0	3.0	3.0
I-2. 취업지원 만족도(점)	85.1	85.4	86.0	86.2	86.4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 환경

- 6·25 참전유공자의 고령(평균 90세) 및 대상자 감소(매년 7~10%)에 따라 생존 시 제대로 된 보상 등 관련 단체의 보상 강화 요구 급증
 - ※ 참전명예수당 지급인원 : '17년 22만명 → '20년 17만명 → '25년 12만명(추정)
- 헌법재판소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나이가 많은 자녀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21.3.25)
 - 합리적인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22년말까지 입법 개정 필요
-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질병 등에 대한 정부 주도의 공무원관련성 입증 자료 확보 강화 및 신속한 심사 통한 빠른 치료지원 등 보상 요구 증대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고용 부담 완화 요구 및 구인 조건 강화로 보훈대상자를 직접 추천하는 보훈특별고용 취업은 지속 감소 추세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른 기존 임차대부 한도액의 주택안정 기여도 하락으로 무주택 보훈대상자의 주거 불안정 심화

□ 갈등 요인

- 보훈대상간 보훈급여금 지급액 차이로 인한 지급액 및 인상 수준의 형평성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 보상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이나, 보편적 복지 확대로 더 높은 수준의 보상 인상을 요구
- 취업 대기자의 높은 기대심리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등 상반된 이해와 입장의 차이

(1) 주요 내용

□ 보훈대상별 합리적인 보상지원으로 공정성 제고

-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를 감안하여 인상
-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보훈대상 간 보상차이 개선을 위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여 형평성 제고 추진
-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초고령화에 따른 생계지원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단계적 인상 추진
-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실질적 소득 보장 기여
-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등 보훈급여 지급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동일 순위의 보훈대상 간 평등권 보장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심사 체계 개선으로 보훈 신뢰성 제고

- 직무관련성 인정기준 합리적 개선 등 대상자 입증부담 완화
 -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거나 직접적인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상자의 입증부담 완화
 - 보훈심사 및 행정쟁송사례 분석 등 요건인정기준 개선
- 국가주도 사실조사를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
 - 공정한 보훈심사체계를 구현 및 대상자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주도 사실조사 범위 및 조사권 강화 등 법제화
 - 사실조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실조사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증원
 - 신속한 안건 검토에 필요한 심사지원 전문인력(간호사 등) 충원

○ 전자심의제 확대

- 보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전자심의제 확대 추진

○ 신체적 희생에 합당한 상이등급기준 개선 추진

- 상이등급기준 및 신체검사 제도개선 연구용역('22.6월~12월)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상이등급기준 등 개선 추진
 - * 시급성·중요성 등을 감안,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하여 단계적 추진
- 신체검사를 대체 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장애진단서 도입에 따른 등급판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유사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종합판정제도 개선안 마련

(2) 세부 추진계획

□ 희생정도 등을 고려한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 (보상금)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사회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재정당국 및 국회 등 적극 협의·추진

<각종 사회경제지표 비교>

* 최근 5년 사회경제지표와 보상금 인상률 비교

구 분	'18	'19	'20	'21	'22
보상금 인상률(%)	5.0	3.5	5.0	3.0	5.0
물가상승률(%)	1.5	0.4	0.5	2.5	2.0
경제성장률(%)	2.7	2.0	△1.0	4.0	3.0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1.16	2.09	2.94	2.68	5.02
공무원 보수인상률(%)	2.6	1.8	2.8	0.9	1.4

【인상목표】 사회경제지표('21년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및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평균 인상률(3.2%)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추가 재정소요(1,000억원) 등을 감안하여 기본 보상금은 3% 수준 인상 목표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1인가구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26년)

* 일시적 대폭 인상 보다는 매년 보상금 인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상 추진

<최근 수당 인상 실적>

수당종류/연도	'18~'19년	'20년	'21년	'22년
참전명예수당	30만원	32만원	34만원	35만원
무공영예수당	36~38만원	38~40만원	40~42만원	41~43만원

**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수당 인상과 연동하여 인상

□ 희생정도 등을 고려한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보훈대상* 간 보상차이를 재정소요,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 상이 7급 및 전몰·순직유족보상금,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 수당 등

□ 보훈급여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

- (현재판결) 합리적 이유없이 수급권자를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우선하는 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은 평등권을 침해 (헌법 불합치. '21.3.25.)한다고 판결
- (개선방향) 현재 자녀 중 연장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방식을 자녀 간 균등 분할로 개선하여 동순위 자녀의 평등권 보장

현행(국가유공자법 13조 준용)	개선(국가유공자법 16조3 조항 신설)
①협의 → ②주로 부양자 → ③나이가 많은 자	①협의 → ②주로 부양자 → ③균등 분할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훈보상 사각지대 해소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23~'25)

* '23 중증장애인 수급자, '24 노인수급자, '25 非노인 수급자 포함 전체

- 참전·고엽제환자 본인 사망 후 생계가 어려워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추진

* ('20. 참전배우자 실태조사) 독거 비중 73%, 기초생활수급률 9.1%

- 국가보훈대상자 최저소득 보장 방안 마련
 - 국가보훈기본선의 적정수준, 일반복지와의 관계정립 방안 등 연구용역('22년)
 - 세부 도입방안 확정 및 법률 개정('23년), 제도 시행('24년)

□ 보훈급여금 적정지급을 위한 부정수급 발생 방지

- (시스템) '범정부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과 '자체 사망의심자료 추출 시스템' 을 통하여 '사망의심자' 실시간 체크(연간 3만여명)
- (협업·공유) 각 기관 산재 '신상변동 의심자료'를 확보, 현장조사 활용
- (현장조사) 협업·정보공유를 통해 확보된 장기간 진료기록 없는 사람 등 신상변동 의심자에 대해 방문·현장조사 실시
- (반복점검) '주간결산제'로 신상변동자에 대한 반복점검 실시(연간 5만여명)
- (보훈급여금 환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부정수취자에 대한 이자 가산 근거 법령 마련('22년)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심사 체계 개선으로 보훈 신뢰성 제고

- 직무관련성 인정기준 합리적 개선 등 대상자 입증부담 완화
 - 의무복무자가 24시간 영내 생활로 사회와 단절된 낮은 환경에서 복무하고, 따돌림·구타·가혹행위 등의 확인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 고의·중과실, 사적행위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훈대상(재해사망) 인정 추진('22년~)
 -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경찰·소방관의 직무특성을 감안,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거나 직접적인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23년 하반기)

○ **국가주도 사실조사를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

- 사실조사 적극 확대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개정 추진

*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마련(6월), 의원입법(7월), 국회통과(∼12월)

- 사실조사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증원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조사반(가칭) : 3개팀 구성(보심 3개과의 심사안전 구분 전담)- 전담인력 증원 : 13명<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 또는 조사업무 경력자(전문관) : 6명(군인 3, 경찰 3)· 부서장 및 사실조사 인원 : 7명(4급 1명, 5급 3명, 7급 3명) |
|--|

- 간호사, 의무기록사 등 심사지원 전문인력 충원

○ **보훈제도 등록 처리 기간 단축**

- (등록신청 제도안내 강화) 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모바일 활용 전역 6개월 전 국가보훈제도 및 등록신청 절차 등 안내 문자 발송 추진('22년)

- (소속기관 자료확인 기간 단축) 각 군본부 인력을 증원하고, 전용망을 통한 자료요청 및 회신 방식 전산화(종이서류 등) 추진('23년~)

- (전자심의제 확대) 보훈심사 심사지원전문인력 증원을 통해, 시간·공간에 제약이 없는 전자심의제 확대로 신속한 보훈심사 추진('23년~'26년)

-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장애인단서 도입)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장애인단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보심에서 등급 판정

* 장애인단서 도입을 위한 법령안 마련 및 국가유공자법 개정('22년 12월)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상이판정 매뉴얼 마련·배포('23년)

○ **의료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신체적 희생에 상응하는 등급기준 개선**

- 상이등급기준 및 신체검사 제도개선 연구용역 실시('22.6월~12월)

< 연구용역 개요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관 및 용역기간 : 대한의료감정학회, '22. 5월~12월- 연구금액 : 194,040천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 상이등급기준 개선 등<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상이등급기준 개선(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 종합판정기준 개선)② 장애인단서 실행방안 제안(장애인단서 서식 및 매뉴얼 개발, 심사역량 강화방안)③ 중장기 발전과제 제안(백분위를 적용가능성 검토 및 등급판정기준 마련) |
|--|

- 최신 의료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고 연구용역 결과, 의학적 자문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등급기준 개선안 마련('23년~'24년)
 - 노동상실률, 장애율 등을 고려한 신체부위별 등급기준 조정으로 등급 간 불합리한 장애내용 개선('23년~'24년)
 - 유사제도(공무원재해, 산업재해 등)는 2개 이상의 일정 등급일 경우 상향판정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종합판정기준표를 단순화하는 개선방안 모색('23년~'24년)
- 보훈처 상이판정시스템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연계 추진('23년~)
- (내용)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해서 전국 5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및 공공·민간 의료기관과 보훈처 상이판정시스템간 진료기록(영상 등)정보를 연계하여 등록심사에 활용
- * 진료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영상정보 등)을 치료 중인 의료 기관에서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전자 송수신하는 시스템
- (효과) “우편·전화 → 전산 송수신”을 이용한 의무기록 확보방식 전환으로 등급판정업무 효율화 증대 및 등록기간 단축 기여 예상
- 신체검사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노력
- 정밀검사, 문진 등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체검사 실시
 - 신체검사 전담의사를 확충한 상시 신체검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신체검사 체계 운영('22년 6명 → '23년 12명)
 - 보훈병원, 지방청 순회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만족도 및 제도 개선 방안 발굴 추진('23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625 참전유공자 평균연령(90세) 감안, 참전수당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상 불가피
-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안 21대 국회 다수 발의

- 보훈심사는 의학적 인과관계 보다 근무여건 등 특수성을 감안, 국가 책임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외부 지적
- 의학기술 발달로 장애에 대한 기준이나 측정 방법이 수시로 변화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짐
 - * 과거에는 장애로 인식하지 않던 PTSD, 흥터 등 질병에 대해 최근 들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장애로 인식
- 신청인 권리의식 증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기대 상승하면서, 신청건수 증가 및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가 주도 사실조사와 신청인 입증부담 완화 요구 확대
-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 자살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 등으로 인정 한계
-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을 반영하여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립해야 하나, 특정 집단·질환에 대한 등급 기준 완화 요구로 다른 질환 대상자들과의 공정성·형평성 논란 야기

(4) 참고자료

□ 국내 타 제도의 본인 보상금 대비 유족 보상률

구 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 시)	본인 연금액의 60%	본인 연금액의 60%	해당 없음
순직자 유족연금	순직자 본인 소득의 43%+5~20%	일반순직자 본인 소득의 38%+5~10% *위험직무(43%+5~20%)	사망자 본인 소득의 47% + 5~20%

* 전몰·순직군경유족의 보상금 지급수준 개선 추진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상수준 조정

(1) 주요 내용

□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취업·대부 지원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 지원 및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부 지원 필요

(2) 세부 추진계획

□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 고도화 및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의무고용 업체 요건* 및 고용비율**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 추진

* 총 종업원수 20인 이상 업체(200인 이상 제조업체) ** 업종별 3~8% 고용

- 취업지원 제도 개선(의무고용률 관련) 연구용역 실시('22년 하반기)
 - 취업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취업 의사가 있는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고용의무 부과 대상 적정규모 및 비율 등 도출
- 보훈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개편방안 마련('23년 상반기)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력·연령·희망직종 파악 및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교육·훈련 서비스 전환

- 보훈대상자 특성 및 지역별 주요 취업기관의 채용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업의 구인 수요 등을 상세하게 파악·분석(실태조사, '22년 하반기)

□ 대부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대부신청 등 신규 사업 추진

- 온라인 대부신청 시스템 구축('22년)
 - 위탁은행과 협의하여 별도 제출서류가 필요없는 소액대부(생활안정대부)부터 시범실시('22년말)

-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편의 제고('24년)
 - 통합보훈시스템 개선으로 고지서 납부 및 계좌입금에 대하여 개인별 가상계좌 도입

□ 대상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부제도 및 담보제도 개선 추진('22~'26년)

- 부동산 가격 인상 및 물가상승 등 외부여건을 반영하여 대부한도액 단계적 인상 추진('24~'26년)
- 담보제도 개선으로 현 제도상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한 대부서비스 제공
 -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보증('22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19~34세 구직 인원 감소 등 취업지원대상자 고령화
- 4차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이 고도화되었으나, 기업체 요건('97년), 의무고용 비율('99년) 등은 20년간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
- 의무고용비율 하향 조정 시, 보훈단체 등 반발 예상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의 지속적 인상 추세에 따라, 보훈 대부 저금리 유지에 필요한 국가재정소요 증가

(4) 참고자료

□ 취업지원실시기관 의무고용인원 및 채용 현황('22.4.30. 기준)

구분 \ 기관		합 계	국 가 기 관	기 업 체	사 립 학 교
기관·업체수		16,121	920	14,031	1,170
의무고용인원		209,438	8,485	195,943	5,010
취업 인원	법정취업인원	82,563	5,267	75,464	1,832
	법정취업률	39.4%	62.1%	38.5%	36.6%
잔여인원		126,875	3,218	120,479	3,178

기 본 방 향

◇ 성과목표

- 성과목표 1 :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 성과목표 2 : 국가유공자의 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 그간의 성과

- 보훈병원 치료-재활-요양 연계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 코로나 19 대응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 위탁병원 지정 확대를 통한 경증·만성질환 적기 대응, 감면대상자 약제비 예산 반영을 통한 의료보장성 강화, 의료품질 관리를 위한 우수 위탁병원 인증제 최초 도입
- 보훈가족의 심리적 상처를 보듬는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최초 시행 및 민·관·연 협업 스마트 재활의료 보철구 개발
-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소외된 분들을 찾아내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
-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천보훈병원’ 개원을 통해 인천·경기·서부권 25만 보훈가족의 진료 편의 제공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 원주·전주보훈요양원 추가 건립·운영으로 요양수요 적기 대처

◇ 임무와 전략목표간 상관성

- 보훈병원 시설 확충과 위탁병원 확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문 재활서비스를 통해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수준 높은 보훈요양서비스 및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로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1) 주요내용

□ 의료서비스의 질 강화 및 의료접근성 제고

- 보훈병원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위탁병원 지정 확대
-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 체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보훈요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수준 제고

(2) 성과지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 대상자 만족도	-	-	90.37	91.94	89.92	92.19	○ 최근3년 평균 90.74점, 연평균 증가율 △0.25임. 코로나로 보훈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등 만족도를 높이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 연평균 증가율 0.5로 설정하고 '26년 목표치 설정 * 최근 3년간 만족도(평균 90.74) - '19년 90.37, '20년 91.94, '21년 89.92 - 연평균 증가율 △0.25	각 사업별 규모에 따른 가중치 적용 합산	전문조사기관 의뢰 서비스 이용자 대상 개별 전화 및 면접 설문조사

※ 국가유공자 복지서비스 만족도 측정 산식

구분	실적(점)		'22년 목표(점)	가중치	반영점수	조사기관	발표시기(매년)	비고
	'20년	'21년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¹⁾	93.6	88.7	89.2	0.3	26.76	전문조사기관 의뢰	9월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²⁾	88.2	86.1	88.8	0.3	26.64		9월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 ³⁾	92.1	92.9	92.2	0.3	27.66		12월	
보훈요양원 서비스 만족도 ⁴⁾	97.7	96.1	96.5	0.1	9.65		9월	
총 계	91.94	89.92		1.0	90.71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1	'22	'23	'24
II-1. 보훈의료서비스 수혜율(%)	24.6	25.3	25.5	26.0	26.5
II-2. 보훈복지서비스 수혜율(%)	4.09	4.52	4.60	4.49	4.43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지역간 의료지원 격차 및 의료이용 제약에 따른 의료비 부담 및 의료이용 사각지대 해소 요구
- 전국에 8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21.12월 기준 전체 대기자의 86%(636명)가 수도권(수원,남양주) 보훈요양원 대기 중, 이에 보훈단체 등에서 수도권에 보훈요양원 추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
- 재가복지서비스 공무원근로자(사회복지사, 보훈상담원) 복수 노동조합 설립 후 노사, 노노 갈등 증가 및 직군별 처우개선 요구 급증

(1) 주요 내용

□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병원 중심의 의료·재활·요양 서비스 제공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가 적시에·우수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 및 의료품질 고도화
 - 상급종합병원과 MOU 체결 등 우수의료기관과의 협업 강화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대전·대구재활센터, 부산요양병원 건립
 - 보훈병원·위탁병원 간(중앙↔지방, 보훈↔위탁)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 체계적, 맞춤형 신체·심리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효과성 제고 및 국가유공자 삶의 질 향상
 - 재활센터 확충 및 다양한 재활체육 진흥으로 신체적 재활 촉진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철구 보급으로 국가유공자의 활동력 향상 지원
 - 국가유공자 특성 반영한 맞춤형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및 의료 연계

□ 의료이용 접근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해소

-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 전환추세와 복합·노인성질환자의 의료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위탁병원 지정 확대
 - * (기존) 외래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 → ('22~'25년) 요양·입원서비스 확대
- 의료지원 확대 및 보훈병원-위탁병원 간 의료지원 격차해소를 통한 보훈대상자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범위를 약제비까지 확대, 연령(75세 이상)에 따른 이용제약 해소
 - * (보훈병원) 연령제한 無, 진료비와약제비 감면지원
 - (위탁병원) 75세 이상자만 이용가능, 진료비 감면지원(약제비 제외)
-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 지역의 보훈의료서비스 소외문제 해소 추진을 통한 보훈대상자 의료권의 강화
 - 도서벽지 지역의 공공병원을 보훈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2) 세부 추진계획

○ 보훈병원 의료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 중앙보훈병원 내 기존 치과병원 증축과 노후화된 병동 개선 (대전·대구병원) 등을 통해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

구 분	중앙치과병원 증축	대전병원 리모델링	대구병원 주차장 증축
사업기간	'19.1월~'23.8월	'20.1월~'23.8월	'22.1월~'23.12월
사업규모	지하4층~지상5층 (10,503.73㎡)	지하1층~지상5층 (14,523㎡)	철골주차장 1개층 증축(47면 추가)
총사업비	460억원	230억원	27억원
진행상황	골조공사중	순차적 공사 진행중	설계 진행중
조감도			미정

- 진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대전·대구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 추진('19~'22)으로 장기 입원수요 대응

- * 지방보훈요양병원 설립 타당성조사('18.8~11월) 결과를 근거로 병상규모 등 건립 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진행
- * △부산요양병원 · 대전재활센터 '22.12월 완공 △대구재활센터 '22.10월 착공
- * (광주요양병원) 완공('21.12.), 의료진 수급 문제 해결 후 '22.9월 준공식 예정

구 분	대전병원 재활센터	대구병원 재활센터	부산병원 요양병원
사업기간	'20.1월~'22.12월	'20.1월~'23.12월	'19.1월~'22.12월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4층 (4,510㎡, 40병상)	지하1층~지상4층 (5,027㎡, 40병상)	지하1층~지상6층 (9,426㎡, 180병상)
총사업비	143억원	171억원	418억원
진행상황	토목공사 진행중	설계 진행중	토목공사 진행중
조감도			

○ 보훈병원 의료품질 및 진료역량 제고

- 보훈병원별 보훈대상자 다빈도 질환 중심 진료 특성화

【 보훈병원 특성화 발전 】

중 앙 : 특화센터 활성화	지 방 : 고령 보훈환자 전문분야 활성화
△ 암·혈관인터벤션·심혈관센터 로봇수술센터 등 활성화 △ 중앙-지방 및 중앙-위탁병원간 진료협력 시스템 활성화	△부산(혈액종양), △대구(순환기), △대전(내과) △광주(뇌신경·비뇨기·재활센터), △인천(정형)

- 보훈병원 적정성 및 의료품질 평가등급 향상 추진

* 4대암, 약제급여 등 부진항목 등급 향상을 위한 인력 총원 등 집중관리로 1등급 평가항목 31개 획득('21년 44개)

- 완화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치매프로그램, 재가서비스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

- 진료적체 해소 노력을 통한 적기 진료서비스 제공

* 주요 적체 진료과 및 1인 진료과 등을 중점으로 진료 대기해소 추진 (전문의 등 적정 인력 증원, 장비구입, 초청진료, 외래세션 확대 등)

○ 근접진료 강화를 위한 위탁병원 확대

-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지역적 특성 및 대상자 분포 반영, 위탁병원 확대

* ('21년) 시군구별 2개소 → '27년 시군구별 5개소 수준

- 고령·복합질환자를 위한 요양병원과 입원수요 대응 위한 병원급 중심으로 하되, 의원급은 안과·치과 등 특수진료과를 가미

* ('22년) 의원급 위주 120개소 확대 → ('23~'27년) 병원급 비중 증가

○ 의료지원 확대 및 보훈·위탁병원간 격차 해소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지원 확대)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에게 약제비를 추가지원

* 위탁병원 의료지원 확대(진료비 → 진료비+약제비)

↳ 약제비 지원근거 마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국가보훈처 고시제정 등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11만여명), 연간 280억원 경감

- (의료격차 해소) 위탁병원 감면대상자도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연령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위탁병원 연령기준(75세 이상) 폐지 추진

* 국정과제 포함, '23년 소요예산 반영을 위한 재정당국과 조정·협의

* 국가·참전유공자법 개정안 국회제출('22.12월, 정부입법)

○ 의료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통한 보훈대상자 의료권익 강화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보훈병원으로 활용, 보훈병원의 수준(의료대상자, 의료지원 범위)으로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 신규 도입제도 및 재정소요를 감안, 도서벽지 등 시급한 지역을 우선 하여 운영 후 연차적 확대('24년 제주도, '25년 강원도)
- * 효율적·체계적 접근위한 연구용역('23년 상반기), 국가유공자법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23.12월, 정부입법)

○ 재활센터 확충, 재활체육 진흥 및 스마트 보철구 보급 추진

- 광주·부산 재활센터 개원으로 전문적·체계적 재활 치료 제공
- 상이군경 국제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일상재활체육* 활성화
- * 지역별 보육체육캠프(늑시·승마 등), 찾아가는 재활체육교실(온·오프 병행)
- 로봇 의수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철구 개발·보급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심리재활서비스 내실화

- 기초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 제공
- * 코로나19로 원격상담 체계 구축, 화상상담 제공으로 대상확대 및 접근성 향상
- 보훈대상자 연령 및 특성, 선호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 프로그램 개발·활성화 방안 연구, 대상자 모집 및 시범 운영('22년)
- 트라우마 등 심리 상담과 의학적 치료 연계로 심리 치유 효과 제고
- * 보훈병원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트라우마센터' 설립을 통한 진료 연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수요 지속적 증가, 특히 만성질환 관리와 정신건강 향상 등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 *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이 마음건강상 어려움 호소, 우울·외로움(45.2%),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22.4%), 트라우마·악몽(18.7%) 등 ('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

○ 의료품질과 접근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대상자들의 지속적인 요구

- * 보훈대상자 가구소득 중 '의료비' 지출 비중(36.9%)이 높고, 치료 중도 포기자의 주된 사유가 '진료비 부담(39.9%)'으로 확인 ('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

(4) 참고자료

□ 각 국의 의료지원제도 비교

- 외국에서는 신체적 희생도에 따라 중상이자는 국비로 진료하고, 경상이자는 상이처에 한하여 치료하며 소득기준을 적용

구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대 한민 국
보훈 의료 전달 체계	· 보훈병원 170 · 외래진료소 1,074 · 종합재가치료소 88 · vet center 300 · 정형·보철연구소 59 ※ 보훈병원은 공공 의료의 선도 역할 · CCN을 통한 위탁병원 관리	· 보훈병원 1 · 민간의료기관·의료인과 진료 계약 체결	· 지정병원 250 ※ '92~'95, 12개 보훈병원 주·민간 이관 · 계약사립병원 428 · 비계약 사립병원 - 보훈부의 사전 승인 또는 응급시	· 보훈병원 6 · 위탁병원 510 ('22.3월 기준)
지원 내용	· 입원치료 - 복무관련상이자 (50%이상) - 비복무관련상이자 (저소득) · 외래진료 - 50%이상 상이자 모든 질환 - 기타 상이자의 상이처 진료 · Blue Button 서비스 - 재향군인이 자신의 의료기록 열람 가능, '13년 전국민 확대 · Veterans crisis Line - 재향군인 대상 무료 심리상담 전화서비스	· 입원·외래진료 - 상이처 질환에 대한 국비가료 - 여타질환 : 지역 의료보험 미충족, 자활프로그램 서비스 받는 자, 저소득자 한정	· 입원·외래진료 - Gold Card : 모든 질환 - White Card : 상이처 및 특수질환 - Orange Card: 약제비 혜택	· 입원·외래진료 - 국비환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부담진료비 지원 - 감면환자 :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비상이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위탁병원 감면진료비 지원 · 보철구 지급, 재가복지서비스 연계 · 국제 재활체육행사 지원,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운영 · 심리재활 지원
진료비 부담	· 우선그룹 1(상이50% 이상)은 전액 국비진료 · 상이그룹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있음 (입원, 외래, 약제, 장기요양)	· 상이처에 한해 국비진료 실시 · 저소득자에 대해 의료혜택 있음 · 약제비는 일부 본인부담	· 중상이자(100%), 50%이상 상이자 중 저소득자, 유족 (배우자) 무료 진료 · 약제비는 일부 본인부담	· 국비환자 : 본인부담 전액 국가 부담 ※ 등외자는 상이처 진료만 국가부담 · 감면환자 :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30~90%) ※ 75세이상 고령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약제비 제외)

(1) 주요 내용

□ 국가유공자를 위한 수준 높은 보훈요양서비스 제공

- 증가하는 요양수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훈요양시설 추가 확충
 - 전주보훈요양원 개원('22.4월 개원) 및 수원보훈요양원 증축('22~'24)
 - 수도권 보훈요양원 추가건립 추진(부지선정, 예산확보)
 - * '수도권 보훈요양원 건립 필요성' 연구용역 추진 완료('20년)
 - * 수도권(수원·남양주) 보훈요양원 대기자 : 전국 대기자의 78%인 955명('22.2월)
- 민간과 차별화된 특화 요양프로그램 운영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참전·상이자, 치매 환자를 위한 심리안정 및 재활 집중 치료로 심신기능 회복을 통한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참전자 비율이 60%, 치매환자가 65% 차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제도 활성화
 - 적극적인 제도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민간요양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 재가복지 지원 강화로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 보장

- 보훈대상자에게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의 삶 보장
 - 대상자의 건강·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정기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보훈섬김이 방문횟수·시간 조정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독거·저소득 취약계층 보훈가족의 최소한의 식생활 및 위생환경 유지를 위해 기초생활지원 강화
 - 시스템 운영을 통한 서비스 관리 체계화 및 보훈복지인력 처우 개선과 노사 소통 활성화를 통한 근무 만족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보훈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체계화

- 취약계층 지원대상 발굴을 위한 관계부처 정보데이터 활용 및 위기가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개선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체계화
 - *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능동적 활용을 통한 예측 내실화
 - ** 효과적인 위기가구 예측을 위해 행안부, 국토부 등 정보제공 협업 추진
 - 자체 복지서비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수요에 대해서도 다양한 외부자원 연계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를 위한 수준 높은 보훈요양서비스 제공

- 권역별 전국 8개 보훈요양원 운영(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및 수도권 요양수요 해소를 위한 보훈요양원 확충
 - 수원보훈요양원 증축*(’22~’24)을 위한 설계자 선정 및 수도권 보훈요양원 추가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추진
 - * (증축규모) 100병상 * 기존 222병상으로 증축 후 전체 322병상 규모
- 보훈요양원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수준 및 만족도 제고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심리안정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상이처 및 전쟁트라우마 치료 등 브랜드 프로그램 운영

심리안정치료	인지치료(CBCT)	작업치료	신체재활치료
			

-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민간요양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제도 강화

- ICT기술을 활용한 우수 요양케어기법 도입 등으로 1:1 맞춤형 케어서비스를 통해 요양등급 향상 및 기능회전
 - 중증 외상환자를 위한 ICT 기술도입으로 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AI정서지원 로봇을 활용한 심리안정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화상면회를 위한 태블릿 PC 및 화상채팅앱 활용, 주간보호 차량 알림서비스 등 입소자 및 보호자를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외상환자 스마트빔 상영	원격진료 실시	AI 로봇	주간보호 차량 알림서비스
			

- 입소자 인권존중 강화 및 종사자(요양보호사) 근로여건 개선
 - 입소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식개선 교육 확대
 - * 보훈요양원 인권지킴이 선언 및 캠페인 전개, 인권자치위원회 구성

□ 재가복지 지원 강화로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 보장

-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의 삶 보장
 - 대상자의 건강·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내용 및 보훈섬김이 주간 방문횟수·시간 등 조정하여 개인별 서비스 제공
 - 독거·저소득 취약계층 재가복지대상에게 최소한의 식생활 및 위생 환경 유지에 필요한 기초생활지원(밑반찬, 이불세탁 등) 강화
- 시스템 운영을 통한 서비스 관리 체계화 및 효율화로 만족도 제고
 -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가복지서비스를 종합 관리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서비스 현장 관리로 효율화 도모
 - 정기 만족도 조사(연 2회) 및 시스템을 통한 주지적 모니터링을 통해 수혜자 욕구 및 서비스 수요분석을 통한 만족도 제고
 - 복지인력과의 갈등 해소 및 상생의 문화 정착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 보훈대상자에 대한 일반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체계화
 - 저소득 보훈대상자 정보 연계·축적을 통해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제도적 지원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보훈복지의 일반복지+a 효과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초연금 등 일반 사회복지 제도에서 보훈대상자 형평성 제고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상이국가유공자의 장애인 지원제도 이용을 위한 법적 장치 확보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보훈대상자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이에 따른 요양수요도 급격히 증가, 요양시설 확충 필요
-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지원 요구 및 생계 곤란자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요구
- 복지인력 정규직 전환 후 노동조합 설립 및 처우개선 요구 등 노무 분쟁 발생 및 노사, 노노갈등 심화

(4) 참고자료 : 타부처 유사서비스 비교

구 분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장기요양급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자격	요양등급자 (1~5등급,인지지원 등급)	등급외 A, B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건강상태 등 평가)
	소득	-	중위소득 160%이하 (1인 : 3,111천원, 2인 5,229천원)	
대상자 선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시군구)	보훈(지)청
서비스 제공	인력	요양보호사	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	보훈섬김이 (요양보호사)
	기관	민간 위탁		국가보훈처
제공시간		방문요양 일 평균 3시간 (1~2등급 최대 4시간)	월 27시간/36시간 선택	주 1~3회
본인 부담		있음		없음

□ 국내·외 보훈요양원 운영 현황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명칭	보훈요양원	보훈요양원	주정부 보훈요양원	세인트 앤 병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주체	국가보훈처 (보훈공단 위탁)	보훈부 (보훈의료청)	주정부	제대군인부	국립참전자전쟁 희생자사무국
대상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제대군인 및 가족 * 평균연령 84.3세 로 주로 2차 세계대전 참전자	참전·전쟁희생자 우선권 부여 (일반인 가능)
규모	6개 (1,200명 수용)	133개 (11,000명 수용)	146개 (18,000명 수용)	1개 (500명 수용)	8개 (600명 수용)
제공 서비스	- 24시간 전문 간호 및 케어 - 회복 및 재활 서비스 - 심리안정치료 프로그램 - 치매 및 인지장애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6개 요양원)	- 24시간 전문간호사에 의한 케어 - 회복 및 재활 서비스 - 정신건강치료 프로그램 - 치매 및 인지적 질환에 대한 특별 케어 서비스 - 생애마감자를 위한 완화치료 및 호스피스 서비스	- 돌봄서비스 - 가정방문서비스 (53개 요양원) - 주간보호서비스 (2개 요양원)	- 장기 요양 및 임시 간호 - 스트레스성 외상 치료 - 치매 또는 정신과 치료 프로그램 -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 장기 요양 - 참전용사를 위한 각종 이벤트 (축하 행사, 전시회, 연극)
특성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 거주자 중심 케어 보호자 접근성 용이한 입지	보훈부에서 건립비 (최대 65%)와 보훈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병원 직원들, 봉사자들, 입소자들 간의 깊은 상호 연관	1·2차 세계대전 중 창설
민간 요양원 이용시 지원	민간 요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5년 2,089개소 2,500명 지원")	보훈부에서 민간 요양원 이용시 이용료 지원, 650개소 지정, 운영		민간 요양원 이용시 이용료 지원(22%를 이용자 부담)	공공 및 민간요양시설 중 적합한 곳을 지정 "블루에 드 프랑스(bleuet de france)" 라벨을 부여, 76개소 운영 및 6,840명 지원
보훈대상자 비율	5,130만명 중 86만명 차지(1.7%)	3억2370만명 중 2,300만명(7.1%)		3,430만명 중 69만명(2.0%)	6,626만명 중 284만명(4.3%)
면적	99,720km ²	9,826,675km ²		9,984,670km ²	643,801km ²

전략목표 Ⅲ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기 본 방 향

◇ 성과목표

- 성과목표 1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안장 지원 등 예우 체계를 강화한다.
- 성과목표 2 :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 그간의 성과

- 독립유공자 발굴 · 포상 확대
 - ▶ ('18년) 355명 → ('19년) 647명 → ('20년) 585명 포상 → ('21년) 656명 포상
 - ▶ 민관 협업을 통해 학술회의 개최, 여성 독립운동가 298명 발굴
- '미등록 6.25 참전유공자 외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몰·순직 유자녀 등 발굴 대상 확대
- 공적조사를 통한 포상의 신뢰성 제고 및 사료수집 확대
 - ▶ (공적조사 인원) '19년 273건 → '20년 713건 → '21년 920건
 - ▶ (사료수집 확대) '19년 266,271매 → '20년 314,345매 → '21년 312,028매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사망시 품격있는 예우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 및 자긍심 제고
 - ▶ (명패부착) '20년 174,745명(92.9%) → '21년 107,965명(96.9%)
 - ▶ (대통령 근조기) '19년 13,754명 → '20년 11,702명 → '21년 13,355명
 - ▶ (안장심의 기간) '19년 39.4일 → '20년 38.2일 → '21년 37.6일
- 생계급여자('18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21년)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22년)로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 (장례지원 실적) '18년 544명 → '19년 505명 → '20년 496명 → '21년 1,046명

- 국립묘지 조성·확충을 통해 안장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현충선양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 ▶ (국립묘지 조성) 국립제주호국원(1만기) '21.12월 개원
 - ▶ (국립묘지 확충) 대전현충원 충혼당(4.9만기) '21.5월 개관
 - ▶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19년 151건 → '20년 157건 → '21년 168건

◇ 전략목표와 임무의 관계

-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적기에 확충하고 산재묘소 관리 강화 및 사망시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이 마지막까지 명예롭도록 국가책임을 다함
-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발굴 확대 및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함

(1) 주요내용

□ 산재묘소 관리 및 사망 시 예우 체계화 등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 사망 시 예우체계 정비 및 안장·장례서비스 품질 향상
- 국가유공자 산재 묘소의 국가책임 강화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 수요자 중심 국립묘지 안장 지원 및 현충선양활동 확대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안장서비스 제고
- 국립묘지 현충선양 프로그램 활성화

□ 국가유공자 발굴 확대 및 사료 수집·연구기반 강화

- 독립유공자 적극 발굴·포상
- 미등록 참전유공자 지속 발굴 및 대상 확대
- 국내외에 산재한 독립운동 기록을 수집·분석 및 체계적 관리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국가유공자 예우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 결과(점)	-	-	75	81	79.2	81	○'19년 신규지표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치 78.4점이며 ○매년 실적치의 편차가 매우 큼 ※ ('19년) 75점 ('20년) 81점 ('21년) 79.2점 ○설문조사의 특성상 다년간에 걸쳐 목표를 상향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최근 3년간 평균치(78.4점)에서 3.3% 상승한 81점으로 목표 설정 ※ '22년 실적 감안, 재조정 예정	·조사대상 : 일반 국민 1,000명 ·조사방법 : 전화 조사 ·조사기관 : 외부 전문 조사기관 ·조사일시 : 매년 11월 2-3째 주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조사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1	'22	'23	'24
I -1. 국가유공자 예우문화 확산	-	121.9	우수*	우수	우수
I -2. 독립유공자 포상인원(명)	585	656	630	630	630

* 측정산식 변경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국가유공자 등 고령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사망 시 안장·장례지원 수요 증가 및 묘지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독립유공자의 훈격 재조정 등 재심사 요구로 인한 민원 및 사회적 논란 발생

(1) 주요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체계 마련 등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 통합 법령 제정, 생전 안장 심의제도 개선 등 사망 시 예우 체계 정비
- 마지막 가시는 길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 제공 및 안장 지원 개선
-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적증서 증정, 경찰 에스코트(빈소→장지) 대상 확대 등 장례 의전 강화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국립묘지 안장심의제도 개선을 통한 대기기간 단축 및 생전 안장 심의대상 추가 확대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22년은 공상군경 유족, 무공·보국 수훈자 유족 등 대상 확대, '23년 이후부터 신규 등록 및 유지·보수 대상으로 추진

□ 국가유공자 산재 묘소의 무연고화 방지 및 국가책임 강화

- 전국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에 대한 국가관리묘역 지정 확대
-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전수조사를 통한 소재 확인 및 묘지 관련 비용(단장, 이장비 등) 지원 강화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및 국민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유해봉환 행사 추진

□ 수요자 중심으로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하고 국립묘지를 현충선양활동의 장으로 활용

-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대비, 안장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
- 기존 국립묘지 내 안장시설 확충 및 거주지역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규 국립묘지(제주, 연천)를 조성하여 안장능력의 안정적 확보

- 현충선양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전 국립묘지 품격을 상향 평준화하고, 코로나19 및 IT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현충선양프로그램 발굴

□ 고품격 안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묘지 관리운영 제도개선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체계개편을 통한 관리운영 효율화 추진
- 국민 생명 지키는 경찰·소방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확대

(2) 세부 추진계획

□ 법령 제정 및 안장심의 제도 개선으로 사망 시 예우 체계 정비

- (사망 시 예우 법령제정) 사망 시부터 안장, 안장 후까지 사망 시 예우 전반에 대한 법령 통합·정비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체계 마련
- (생전 안장 심의제도 개선) 위원회 회의 확대 운영(월 2회 → 4회), 육군본부 병적조회시스템 추가 연계, 심의제도 개선을 통해 안장심의 대기기간 단축

* 안장심의 대기기간 : (20년) 38.2일 → (21년) 37.6일 → (22년) 37.0일(목표)

□ 국가유공자 마지막 가시는 길 안장 및 장례서비스 품질 향상

-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 생활이 어렵거나 가족이 없는 사각지대의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 제공
- (마지막 애국지사 사회장 추진) 마지막 애국지사 작고 시 사회장 등 장례의전을 격상,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추모 분위기 조성
- (안장 지원 개선) 산재 묘소 단장 단가 인상 및 일관성 있는 지원, 최근 장묘문화 변화를 반영해 봉안시설 사용료 신규 지원

□ 국내외 산재 국가유공자 묘소의 무연고화 방지 및 국가책임 강화

- (독립유공자 묘소 찾기)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와 연계, 묘소 위치를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국내외 묘소 전수 조사 추진
- (합동 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확대) 전국 합동 묘역의 기초실태조사 및 유형별 관리·실행방안 마련 통해 국가관리묘역 지정 확대
- (산재 묘소 지원 확대) 전몰군경 묘소 실태조사 등 관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묘소정보 DB구축 등 묘소관리 효율성 제고
- (유해발굴 및 봉환) 국외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 유해의 체계적·실질적 발굴 기반 마련,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에 대한 국민적 참여·관심 제고

□ 국가유공자 위문 및 명패 달아드리기 등 예우 문화 확산

- 국가유공자의 본인 및 유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추진
 - ('22년) 공상군경 유족, 무공·보국수훈자 유족 등 명패 부착 추진
 - ('23년) 신규 등록자 및 유지·보수 대상 명패 사업 추진

□ 급증하는 안장수요 대응을 위한 국립묘지 조성·확충

- (조성) 사업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주기적 공정회의, 현장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로 집행을 제고 및 품질향상
- (확충)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안장시설 확충 추진

* 인·허가(지방자치단체), 영향평가(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등

□ 고품격 안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묘지 관리운영 제도개선

- 고품격 안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묘지 업무 표준화'
 - 의전·참배, 안장, 묘역관리, 기관운영(행정) 등 업무처리 기준마련
- 안장자공적 공개 확대 및 위치기반서비스 구축으로 국립묘지를 통한 보훈교육기능 강화 및 국민 접근성 개선
 - 제주호국원, 민주묘지 및 신암선열공원 등 2단계 사업실시

- **全 국립묘지 대상 무연고 안장자의 주기적 관리체계 마련**
 - 정기 참배 및 정화활동, 명절 등 특정일 계기 예우 강화, SNS를 활용한 무연고 현충선양으로 국민적 관심과 참여 유도
- **국립묘지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안장제도 개선**
 - 묘소 없는 무후(無後) 독립유공자 위패봉안 방안 마련
 - 유골 없는 배우자 묘비 각자 제도개선
- **2023~2028 국립묘지 종합 관리계획 수립**
 - 안장수급추계, 안장서비스 개선방안 등 향후 5년간의 국립묘지 종합 관리계획 수립하여 미래지향적·효율적인 국립묘지 관리방안 모색

□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활성화로 예우문화 확산

- **현충선양 종합관리체계 구축**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의 기본방향* 수립으로 국립묘지 품격제고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

* (기본방향)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구분	시행기관	주요내용
같은	처본부	국립묘지 홍보영상 제작·배포, 온라인 차례상, 사이버 참배, 국립묘지 소식지(개간지) 운영 등 * 일회성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개편, 안장자 위치 서비스 추가구축 등 사업포함
	각 묘지	계기별 롤콜 및 부대행사, 무연고묘소 헌화·봉사, 참배대행 서비스, 셀프참배기 도입 등
다르게	각 묘지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여 (오프라인)지역연계, 묘지에 특화된 체험형 프로그램 발굴 및 (온라인)자체 SNS, 홈페이지 등 참여형 프로그램 및 IT 기술을 접목한 스토리텔링 등 홍보 등

- ‘22년도 현충선양 BSC 평가계획 및 지표* 신설, 국립묘지 성과공유 워크숍 실시 등 현충선양활동 평가시스템 마련
- **국립묘지 소식지 및 홍보영상 제작·배포**
 - 대전현충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열린 현충원, 밝은 현충원’을

국립묘지로 확대, 묘지별 특색을 반영한 계간지*로 운영

*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국립묘지의 계절별 모습과 행사, 정보 등 제공

- IT시대에 맞는 온라인 형태*로 제작,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확대

* 소식지, 카드뉴스 및 영상 등

○ 공통 또는 묘지별 자체 특성에 맞는 현충선양프로그램 발굴

- (공통) 계기별 롤콜 및 부대행사(사진전 등), ❷ 참배대행서비스, ❸ 셀프참배기 등을 반영한 현충선양 종합계획수립

- (기관별) 고령층 및 미래세대의 참여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립묘지별 특색있는 '온라인 현충선양활동' 발굴

* AR/VR 및 메타버스 등 IT기술 접목, 유튜브 등 SNS 통한 참여활동 개발

○ (의견수렴) 국립묘지 제도개선 사항 현장의견수렴 및 정책의사결정반영

- 제도개선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전문기관 위탁 조사, 11월)

- 국회, 언론, 민원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후 개선

○ (모니터링계획) 민원제기자 중 불만족 민원건수 및 조치내용 등을 파악하여 국립묘지 정책 수립에 반영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급증으로 안정적인 안장능력 확충 필요

- 안장대상자 37.5만명 중 80세이상 8.6만명 수준(전체의 23%)

○ 국립묘지 안장수요에 대비하여 안장능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나, 지역주민 등의 반대(협오시설)로 묘역확충 및 신규조성 애로

※ 국립묘지 조성 반대 주요 사유 중 협오시설이라서가 50% 응답('08년)

○ 관리체계가 구축된 지자체 등의 경우 묘역 관리권을 국가로 넘기는 것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어 국가관리묘역 지정 확대에 애로

* 관리주체별 현황 : 지자체(시설공단·문화원·관리소) 46곳, 보훈단체 등 12곳, 후손 1곳

(4) 참고자료

□ 국립묘지 현황

(2022.4.30. 기준)

구 분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신암 선열 공원
		서울	대전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4·19	3·15	5·18	
면 적 (천㎡)		1,419	3,309	390	448	293	577	898	274	97	128	168	29
조 성 기 간		'54.3~ '55.7.	'79.4~ '85.11.	'97.4~ '00.10.	'98.8~ '01.11.	'02.1~ '07.11.	'04.2~ '14.12.	'12.9~ '19.6.	'12.9~ '21.11.	'93.10~ '95.4.	'98.3~ '03.3.	'94.7~ '97.5.	'82.2~ '87.3.
국립묘지 승 격 (이 관)		'65.3. (국방부)	'79.8. (06.1.)	'06.1. (07.1.)	'06.1. (07.1.)	'07.12.	'15.2.	'19.10.	'21.12.	'95.4. (95.4.)	'02.8. (02.7.)	'02.7. (02.7.)	'18.5.
최초조성 (최초안장)		'54 (56)	'79 (82)	'97 (01)	'98 (02)	'02 (08)	'04 (15)	'12 (19)	'12 (21)	'62 (63)	'67 (69)	'94 (97)	'87 (87)
안 장 현 황	안장 능력	107,721	149,583	52,530	35,568	50,002	10,008	20,356	10,000	10,000	562	122	1,966
	안장 기수	78,269	100,018	48,692	31,583	50,002	8,000	14,186	346	346	484	52	893
	잔여 기수	29,452	49,565	3,556	3,985	-	2,008	6,170	9,654	9,654	78	70	1,073
만 장 시 점		'30이후	'30이후	'23	'23	'17.4.	'24	'22	'30이후	'24	'30이후	'30이후	안장 완료
'22예산 (억원)		301	128	160	114	175	24	115	38	11	4	18	5
확 충 계 획	기간	-	-	'21~'23	'21~'23	'18~'23	'22~'23	'21~'23	-	'20~'22	-	-	-
	기수	-	-	25천기	20천기	50천기	10천기	20천기	-	0.6천기	-	-	-

□ 국립묘지 안장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국립묘지 안장기수	14,155	11,571	11,375	19,835	13,183	14,023

□ 국립묘지 안장심의 현황

(2022.4.30. 현재)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4월
신청건수	1,513	1,581	3,008	2,020	961
안장대상	1,189	1,052	1,983	1,410	713
안장비대상	324	529	1,025	610	248
안장률(%)	78.6%	66.5%	65.9%	69.8%	74.2%

□ 국가관리묘역 현황

(2022.4.30. 현재)

관리번호	묘역명	안장기수	소재지	지정일
제1호	서울수유국가관리묘역	16기	서울 강북구 수유동	'21.2.24.
제2호	안성사곡국가관리묘역	58기	경기 안성시 사곡동	'21.2.24.
제3호	거제일운국가관리묘역	24기	경남 거제시 일운면	'21.7.28.
제4호	거제둔덕국가관리묘역	146기	경남 거제시 둔덕면	'21.7.28.
제5호	거제연초국가관리묘역	35기	경남 거제시 연초면	'21.7.28.
제6호	거제하청국가관리묘역	30기	경남 거제시 하청면	'21.7.28.
제7호	거제장승포국가관리묘역	95기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21.7.28.
제8호	창원진전국가관리묘역	8기	경남 창원시 진전면	'22.1.26.

(1) 주요 내용

□ 독립운동사 사료 수집·연구기반 강화 및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확대

- 국내외에 산재한 독립운동 기록을 수집·분석 및 체계적 관리
- 독립운동사 연구진흥 및 민간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주·객관적인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확대로 후손 찾기 적극 추진
-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주귀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 독립유공자의 영예와 포상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행적과 공적 등을 전수조사

□ 국가유공자 발굴 확대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를 위한 체계를 강화, 개선된 포상 심사 기준 적용가능자 조기 심사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에서 포상전수식 개최 등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외국인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를 위해 계기별 포상 시 재외공관으로 독립유공자 발굴·신청 협조 공문 발송
- 6·25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신속등록을 위해 집중 발굴 추진
- 월남전 참전자, 무공훈장 서훈자 및 유족이 없는 6·25참전 전사자 등 미등록 참전유공자 지속 발굴 및 대상 확대

(2) 세부 추진계획

□ 독립운동 등 사료 수집·분석 및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강화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를 위한 국내외 관련자료의 수집 강화

- (국내) 그간 소외되었던 학생·여성의 독립운동 입증자료 집중수집
- (국외) 사료수집위원* 위탁수집 등 활용하여 국외사료 수집 확대

* 국외 사료수집위원(20명) : 중국 6, 일본 4, 미주 5, 러시아 2, 프랑스 2, 이탈리아 1

○ 독립유공자 발굴, 사료수집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관리체계 강화

- 지자체, 지역 연구·전시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전국 독립운동 사료수집 유관기관 협의회'를 확대 운영('21년 신설)

○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운동정보 복합 제공 서비스」 구축('22~'25)

- (제공방식 고도화) 독립운동 계열, 주요사건, 활동지역·시기·단체 등 독립운동 관련 복합정보 조회 수단 제공('22~'23)
- (정확도 제고) 독립유공자 정보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오류사항을 점검, 정확성에 기반한 “독립유공자 표준 데이터 정립('23~'25)

○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강화' 추진

- 신진 연구인력 양성, 민간 연구지원 강화, 국내외 유관기관 간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독립운동사 연구 동력 확보

* 관련 근거법인 「독립운동사 연구진흥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23~'24)

□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영주귀국 지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금 현실화, 영주귀국 후손들의 종합적인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영주귀국 후손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정착금 지급액을 주거지원이 가능한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수준으로 인상 추진

* 가구원 수에 따라 '22년 50~75백만원 → '23년 96~164백만원

- 교육·의료 등 종합적인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가칭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독립유공자 명예선양 및 후손찾기 강화

- (명예선양)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명예선양
 - 공적검증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호적 독립유공자 신상정보 확인
 - 북한 본적의 유족이 확인되지 않는 무호적자를 우선 창설, 이후 무호적자 전원에 대해 단계별 창설 추진
- (후손찾기)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부의를 통해 적극적인 후손 심사 및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후손찾기 추진
 -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도 족보, 면담 및 지방향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부의하여 심사
 - 지자체와 협업하여 후손찾기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추진

□ 독립운동자 공적 전수조사

- '22년 말까지 2단계 서훈자('77년~'94년) 조사 추진
 - * '22년 공적검증위원회를 통한 조사(목표 960건)
 - 기 검증에서 흠결이 많이 발견된 중국·만주, 국내항일운동 계열을 우선 조사하고 '22년 말까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전수조사계획 재수립
-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공적 등 재정리 추진
 - 공적조사 중 확인 된 이명·생몰년월일·본적 등 신상정보 재정리 및 동일사건 미포상자 발굴, 무호적자 가족관계 창설 지원 등 추진

□ 억울한 분이 없도록 독립유공자 적극 포상

- 독립유공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청 의병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실시('22.4~11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계기별 포상 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에서 포상전수식 개최
 - * '22년부터 연 1회 실시

- 외국인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를 위해 계기별 포상 시 재외공관으로 독립유공자 발굴·신청 협조 공문 발송

* '22년부터 연 1회 실시

□ 미등록 6.25참전유공자 등 발굴·등록 확대

- 미등록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발굴·등록 지속 추진

- 미등록 6.25참전유공자 중 신상확인 곤란자(23만여명) 재조사
 - 지자체 조회 불가, 전적(轉籍) 등 기초자료 미회신자에 대한 재의뢰 실시 및 회신자료 분석 및 동일인 여부 확인

* '22년 상반기 4만여 명 추가의뢰

- 사망자에 대한 참전 여부, 법적용대상여부 확인 후 등록조치

- 비군인, 월남전 등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

- 6.25 비군인(38천여 명*) : 국방부·경찰청 협업, 미등록자 발굴

* 군번이 부여된 비군인(15천 여명), 경찰청 소속 비군인(23천 여명) 참전사실 확인 후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 월남전 참전자(57천여 명) : 생존자* 우선 발굴 및 사망자의 경우에도 파월 여부 확인을 거쳐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 참전명예수당(32만원), 의료감면 등 신속 지원을 위해 생존자 우선 발굴

- 무공수훈자(60천여 명) : 6.25, 월남전 훈장 수여자 중 미등록자 발굴

* 육군본부(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와 협업, 미등록자 발굴

- 6.25전몰·순직군경유족 제적유자녀 전수조사 실시 및 생존자 발굴

- (발굴대상) 1985. 1. 1. 이전 성년도달 제적 전몰·순직군경유족 중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우선 발굴

- (자료조사) 처본부 주관 각 지(방)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몰·순직군경유족 제적자력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발굴 기초자료 확보

- (등록조치) 처본부에서 생존여부 및 주소지를 확인하여 관할지(방)청으로 통보하면 지(방)청에서 후속 등록절차 진행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광복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자료가 멸실되거나 독립운동 활동 및 행적을 입증할 북한, 일본 지역의 자료에 대한 접근 곤란
- 6·25참전 미등록자 42만여 명 중 39만 7천명(94%)이 주민번호가 없고, 오래된 軍 ‘거주표’의 수기로 기록된 한자해독 곤란 등 신상 확인이 어려운 실정
- 신진 연구인력의 감소, 연구지원 미비로 인해 독립유공자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운동사 연구가 위축될 우려
- 독립유공자의 훈격 재조정 등 재심사 요구로 인한 민원 및 사회적 논란 발생

(4) 참고자료

□ 정부 주도 발굴·포상 현황

(2022.3.1. 현재)

구 분		계	'95 ~'00	'01 ~'05	'06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3.
포상인원	계(A)	10,787	2,329	1,242	2,167	526	318	310	341	510	312	269	355	648	585	657	219
	신청	2,290	698	530	430	26	22	15	17	24	18	15	107	134	117	111	26
	발굴 (B)	8,497	1,631	712	1,737	500	296	295	324	486	294	254	248	514	468	546	193
발굴포상 비율(B/A)		78.77	70.03	57.33	80.15	95.06	93.08	95.16	95.01	95.29	94.23	94.42	69.85	79.32	80.01	83.10	88.12

□ 독립운동 사료수집 현황

(2022.5.31. 현재)

구 분	'92~'15	'16	'17	'18	'19	'20	'21	계
국외	480,568	109,158	78,506	42,540	52,610	134,145	101,853	999,380
국내	1,486,195	137,218	177,711	217,828	213,661	180,251	210,175	2,623,039
계	1,966,763	246,376	256,217	260,368	266,271	314,396	312,028	3,622,419

□ 해외 지역별 사료수집현황

(2022.5.31. 현재)

지 역	'92~'15	'16	'17	'18	'19	'20	'21	계
중국·대만	172,747	59,665	26,234	31,938	44,432	124,949	46,364	506,329
일 본	191,608	48,284	20,771	6,780	207	7,475	51,553	326,678
러시아	13,998	520	6,153	2,621	-		1,132	24,424
미주·유럽	102,215	689	25,348	1,201	7,971	1,721	2,804	141,949
합계	480,568	109,158	78,506	42,540	50,610	134,145	101,853	999,380

□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92~'22) * '19년 재선정자 13명 미포함

구 분	합 계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포장
선정인원	416	26	71	239	48	29	3

※ 여성독립운동가 39명, 외국인 서훈자 10명

전략목표 IV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기 본 방 향

◇ 성과목표

- 성과목표 1 : 현충시설 활성화와 보훈단체 선양활동을 통하여 보훈문화를 확산한다.
- 성과목표 2 : 국민참여 보훈체험을 통해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 그간의 성과

- 기존 집합형 연수교육을 온·오프라인 융합형 강의로 전환하고, 체험중심의 창의적인 보훈테마활동, 보훈학습자료의 적극적 배포 실시
 - ▶ 유튜브 실시간 강의 확대 개편(월 1회), 비대면 강의와 연계한 교구재 제공, 「보훈문화포럼」 최초 개최
 - ▶ 초등잡지 '어린이 나라사랑' 발간, 첫 고등학교 보훈교과서 개발
 - ▶ (연수·체험활동 참여인원) '19년 299천명 → '20년 235천명 → '21년 310천명
 - ▶ 한국교원대와 보훈문화교육 MOU체결 및 학교보훈교육센터 설립(2.24.)
- 2·28, 3·8, 6·10만세운동, 학생독립운동의 날 등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부 기념식을 통해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있는 보훈의 가치 전달
- 국내·외 현충시설의 보존·관리를 위한 개보수 및 활성화 등 지원
- 보훈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장려로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단체 및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및 호감도 제고 노력
-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익사업관리팀 신설

◇ 임무와 전략목표간 상관성

- 사회 전반에 보훈문화를 확산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는 임무 달성

(1) 주요내용

□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알리는 보훈정신함양 사업 추진

- (연수·체험활동) 수요자의 눈높이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체험활동 운영 및 문화와 접목한 보훈콘텐츠 제공
- (보훈문화확산) 보훈문화상 시상식, 보훈콘텐츠 공모전으로 보훈 선양정책에 기여한 공로자를 시상하고 보훈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보훈문화확산 추진
- (호국보훈의 달)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

□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념행사

- (정부기념행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기념식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 화합의 계기 마련
- (민간주관행사) 민간주관 행사 컨설팅을 통해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간이 주체가 되는 보훈선양활동을 활성화

□ 현충시설 등을 활용한 생활 속 보훈문화 확산·강화

- 현충시설의 체계적 보존·관리 도모
 -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및 국민 참여 관리체계 구축
- 신기술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
- 국내·외 현충시설 등 건립(지원) 및 보존·관리·활용
 - (국내) 세종 국가보훈광장, 독립의 전당 등 4개소 건립·지원, 민·관 협력을 통한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 추진
 - (국외) 국외 현충시설 등의 복원·개보수 지원 및 재외공관·현지점검 기관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존·관리 강화

□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을 위한 단체선양활동 대국민 홍보

- 보훈행사 및 자체선양활동 추진시 국민참여프로그램 개발 추진
- 사회모범이 되는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 적극 추진
 - 산불피해지역 성금기부 및 농촌일손돕기, 수중정화활동 등

□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 운영 및 수익성과 회원공유 확대

- 강화된 법령 연착륙을 통한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로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에 기여
- 수익사업 성과의 회원 공유 확대를 통한 수익사업 운영 목적 가치 재정립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보훈문화활동 참여 의향도 (점)	-	-	-	-	60	71.8점	'21년 실적 60점에서 매년 3%씩 목표치 상향('21년 신규지표) ('22년) 61.9점 ('23년) 63.8점 ('24년) 65.7점 ('25년) 67.7점 ('26년) 69.7점 ('26년) 71.8점	○ {(평균 결과치-1) ÷ (최고수-1)} × 100	외부 설문조사 기관을 통한 온라인 조사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1	'22	'23	'24
IV-1. 국민참여 현충시설 프로그램 제공건수(건)	-	551	579	591	306
IV-2. 나라사랑정신 함양 체험활동 참여 인원(명)	235	310	319	320	325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지자체 현충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불가 등에 따라 지자체간 관리격차 심화

- 지자체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 협조를 위한 보훈기념시설법 제정 필요

□ MZ세대 등 젊은 층의 현충시설에 대한 저조한 관심

- 온라인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국외 소재한 현충시설 등의 체계적 보존·관리의 어려움

- 재외공관 및 기념사업회 등과 공동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관리

□ 일부 보훈단체의 사회적 이슈에 의하여 단체 이미지 반감

- 국민과 소통하고 나눔과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보훈단체상 정립 필요
- 투명한 수익사업의 운영으로 이미지 제고 필요

(1) 주요 내용

- 법률 제정을 통한 현충시설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 현충시설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20. 12. 24. 국회 제출)
 -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시설을 현충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보훈기념시설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 구체적 사항 규정
- 현충시설을 일상 속에서 즐겨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용
 - 일상에서 기념, 추모 등 보훈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현충시설을 건립하고 이에 대한 개보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훈인프라 구축
 - 현충시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문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어린이·청소년, 성인 및 외국인 등 다양한 수요 계층을 아우르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보훈정신 함양 및 확산
- 국외 독립·UN 참전기념시설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 정신 계승·발전
 - 「美 텍사스 알링턴 참전용사 공원 한국전 참전 기념비」 건립 지원 등 한국전 참전시설 건립·개보수 지원 확대를 보훈외교 강화
-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을 위한 선양행사 인프라를 강화하여 보훈정신 함양과 국민통합에 기여
 - 보훈행사, 단체 선양행사 등과 연계한 국민통합활동 추진
 - 사회공익을 위한 선양수범활동 적극 추진으로 대국민 인식도 제고
-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 운영 및 수익성과 회원공유 확대
 - 강화된 법령 연차록을 통한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로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에 기여
 - 수익사업 성과의 회원 공유 확대를 통한 수익사업 운영 목적 가치 재정립

(2) 세부 추진계획

□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유공자법」에 규정한 일부 조항(3개조항)만으로는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개별법 제정
- 「국가보훈 기본법」적용대상인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시설은 현충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충시설에 포함 필요

□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건립·관리·활용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

-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보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현충시설 건립 및 지원
 - ※ 세종국가보훈광장('23.1월 완공), 독립의전당 건립('22~'25)
- 현충시설에 대한 적기 개보수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 도모
- 현충시설별 맞춤형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현충시설이 지역의 보훈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독립기념관 및 국가관리기념관 운영·활성화

- 5GX MEC 기반 스마트 박물관 구현 및 최신 전시기법을 도입한 안전하고 편리한 전시환경 조성 등 관람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혁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현충시설 기념관을 찾을 수 있는 언택트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강화
 - ※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 서비스 본격 시행 및 홍보 추진('22.6.1.)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임시정부의 정신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시·교육 프로그램 확대

□ 국외 독립운동 및 UN참전시설 건립·개보수 지원

- 국외 독립운동가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기념시설 건립 지원과 독립운동사적지의 보존·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 적기 지원
 - ※ 홍범도기념공원 및 거리 조성(7억원, '22.12.월 완공), 이태준기념관(19억,'24.6월 완공)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를 통해 장기간 방치를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인 사적지 보존·관리 토대 마련
- 국외 UN참전 기념시설 건립 등 지원으로 국제 협력 강화
 - ※ 미 텍사스 알링턴 한국전 참전기념비('22~'23), 호주 퍼스 한국전쟁기념공원('22~'23)
- 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 거행(한국정부 건립비용 266억원 지원)
 - ※ 일시 : '22. 7. 27.(수) 10시 / 장소 : 美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내

□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선양활동 실시로 보훈정신 함양과 국민통합에 기여

- '보훈단체장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 '정부-보훈단체', '보훈단체-보훈단체'간 소통을 활성화 하여 정책공감 확산
- 나눔·지킴·사회가치공유 등 보훈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장려로 국민과 함께하는 존경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하여 국민통합의 역할 수행

□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 운영 강화

- 강화된 수익사업 관리제도 보훈단체 교육 실시
- 보훈단체 수익사업장에 대한 현장중심 실태조사 실시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지역별, 단체별 현충시설 건립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으나 건립 이후 시설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은 저조함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와 참전시설들은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자체 전수조사 및 수시 점검 등이 곤란함
-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공법단체전환 및 보훈단체 수익사업 신사업 진출 등으로 감독 범위 확대 및 고도화 필요
- 강화된 수익사업 관리·감독제도 및 제재처분 등으로 보훈단체 반발 심화 가능성

(4) 참고자료

□ 국내 현충시설 현황

구분	계	비석	탑	동상	조형물	기념관	사당	생가	공원	장소 등
계	2,264	1,141	529	165	51	98	54	47	18	161
독립운동	972	470	102	96	11	72	45	47	5	124
국가수호	1,292	671	427	69	40	26	9	-	13	37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총합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멕시코	카자흐	쿠바	유럽	기타
1,032	483	159	123	69	53	25	13	34	73

□ 국외 참전 기념시설 현황

합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기타
381	271	22	10	7	7	8	5	51

□ 외국 보훈단체 주요 활동

구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대한민국
주요 단체	• 재향군인회(AL) 300만명 • 상이군인회(DAV) 100만명	• 재향군인회(RBL) 75만명	• 재향군인회(RSL) 22만명	•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 33만명 (단체설립법, 특임법) • 고엽제전우회 14만명 (고엽제법) •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18만명 (참전법) • 재향군인회 1,062만명 (향군법)

구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대한민국
주요 활동	• 재향군인회 활동 - 헌혈활동 - 청소년프로그램 지원 - 자선단체 기부 - 기념행사 • 상이군인회 활동 - 국가봉사프로그램 - 수송서비스망 운영 - 고령·장애 제대군인 지원 - 고용지원, 기념행사	• 생계지원 • 노인주택지원 • 청소년프로그램지원 • 자선단체 지원 • 양귀비꽃추모운동 (Remembrance Poppy Campaign) • Encounters with Canada사업	• 요양원·양로소 주간보호시설 등 (30개소) • 양귀비꽃추모운동 • 지역사회기념사업 활동 • 재향군인클럽 (RSL)운영 • 유산(Legacy) 활동	• 정부기념행사, 단체 추념식 참여 • 단체특성에 맞는 선양사업 전개 • 보훈회관 및 복지회관 주민개방 등
비고	• 회비 • 기부금 • 기념품 판매수입	• 회비 • 기부금 • 양귀비꽃 조화 수입	• 회비, 기부금 • 양귀비꽃 조화 수입 • 복지시설보수 보조	• 정부보조금 • 수익사업 • 회비·기부금

(1) 주요 내용

□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알리는 보훈정신 함양 사업 추진

○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정신계승 연수 활성화

- 대상자별 맞춤형 온라인교육 및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육 활성화
- 학습자료,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자료를 통해 MZ세대들에게 효과적인 연수·교육 실시

○ 다양하고 효과성 높은 청소년 보훈문화 체험활동 추진

- 학교 교과과정 등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소년 참여 확대 도모

□ 보훈문화 확산의 기반 마련

○ 3년 주기 국민의 보훈문화 인식실태 조사를 통해 보훈정책 수립의 방향성 설정

○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보훈 통합 아카이브」 조성

□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개최

○ 나라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국민화합의 계기가 되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 방송·옥외광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호국보훈의 달 공익광고 및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달기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

○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경찰 등 제복근무자(MIU)를 존중하고 그들의 공헌에 감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부기념행사로 진정한 보훈의 의미 전달

- 기념일별 차별화된 정부기념행사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국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부기념행사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미래세대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활성화

- 수요자 맞춤형 보훈콘텐츠로 보훈학습자료 제공
 - 초등, 중등, 고등학생 각 수준별 특성에 맞는 보훈잡지, 교과서,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다양한 학습자료 개발
 - 교원 대상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보훈주제 모범 수업안 개발·보급

□ 다양한 보훈문화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한 초·중·고 교생 대상 체험프로그램으로 '보훈 테마활동' 공모 선정 및 지원



- 학교 학급 단위로 교과와 연계한 보훈체험 학습과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보훈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 교육부 진로체험 활동 시간과 연계한 청소년 재능나눔 활동인 '청소년 보훈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

□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개최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업 강화
 -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대외유공 포상, 위문·위로 행사 실시
 - 희생·공헌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상에서 전달하기 위한 이벤트 추진
 - * 대국민 SNS 참여 이벤트, 민간기업 협업 캠페인 등
- 온라인 매체, 스포츠 등 연계 대중 마케팅 강화
 - 호국보훈의 달 홍보 콘텐츠 제작, 야구 등 인기 스포츠 시구 행사
- 보훈의 상징 「나라사랑 큰나무」 달기 캠페인 전개
 - 파급력 높은 사회지도층 인사 및 TV뉴스 앵커 패용 협조
 - 배지 외 일상 굿즈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유도
- 소방, 경찰 등 제복근무자(MIU)를 존중 문화 조성 캠페인 전개

□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념일별 차별화된 행사 추진

- 독립·호국·민주 각 기념일의 의미에 맞는 행사 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기억하고 기리는 보훈기념사업 추진
 - (독립)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 감사하는 행사(4·11, 6·10, 11·3, 11·17)
 - (공통) 호국영령 추모 및 애국정신 계승 행사(6.6)
 - (민주) 민주화운동 재인식, 국민화합의 장 마련(2·28, 3·8, 3·15, 4·19, 5·18)
- 정부기념행사 주제(슬로건) 인터넷 공모·참여 신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일반국민 참여 확대
- 지역별 민간단체 주관 계기행사 지원으로 나라사랑정신 계승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화합의 토대 마련
 - 3·1만세운동 재현행사, 3·1절 및 광복절 계기 독립운동 기념행사
 - 윤봉길의사 상해 의거,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등 주기적인 독립 기념행사 적극 지원을 통해 애국심 계승 발전
 - 3·15, 4·19, 5·18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 행사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독립·민주화운동 관련 정부기념일 대부분이 국민적 관심도가 낮아
관련단체 및 유가족 등 일부계층 중심으로 기념행사 진행
- 정부기념행사 성격별(독립·호국·민주) 국민정서의 이질화로 인한
갈등과 국민 분열 요소 내재
- 보훈교육연구원 관리 주체가 우리 처와 보훈복지공단으로 이원화
- 연구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문화 및 콘텐츠 관련 전문성 부족
- 관 주도식 보훈문화교육의 시대적 반감 및 문화와 접목한 보훈
콘텐츠 부족

(4) 참고자료

□ 외국의 보훈선양교육 사례

국명	주요 교육 방법
프랑스	▪ 알제리 전쟁의 역사 전달 교육 프로젝트 - 교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디지털 전시회, 교육키트 등), 연수 제공 ▪ 국민기념일 참여기회 제공 - 16~25세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전사자 및 실종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기수 선발(ONACVG가 국가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관리) ▪ Les Petits Artistes de la Memoire - CM1, CM2 학생 대상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군 추모 작품 공모전 ▪ Bulles de memoire - 중고등학생 대상 주요 기념일 주제로 코믹 스트립 제작 행사
캐나다	▪ Take time to Remember 활동 소책자 발간 -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추모·기억할 수 있는 활동을 담은 교육자료 ▪ 해외 전적지 순례 프로그램 (Pilgrimage Program) -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공헌한 캐나다 참전군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에 일주일 간 탐방 기회 제공(전액보조) ▪ 고등학생 대상 추모 교육자료 배포 - 교사용 강의계획서와 교수학습자료를 배포(심화토론 기회 제공) ▪ 숨겨진 우리 영웅 찾기 프로젝트 (Lest we forget) - 학생들이 도서관 및 기록보관서에 방문하여 1,2차 대전 참전군인 기록연구 ▪ 우리학생 프랑스 안내 프로그램 운영 - 15~18세 학생 지원자를 대상으로 프랑스에 있는 기념관(캐나다 참전용사 추모 목적)의 가이드로 채용

국명	주요 교육 방법
영국	- 전영 추모수목원 및 육군기념관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교과과정 기반의 포괄적인 현장학습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 대상 추모 탐방 (Remembrance Travel) 기획 - 추모교육 (Remembrance Education) 자료 무료 배포 - 학교 및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National Literacy Trust와 협력 제작
호주	- 안작데이(4·25), 현충일(11·11) 기억상자 (Memorial Box) 배포 - 기억할 만한 물건 가져오기 (Bring in their memorabilia) 캠페인 - 전쟁에서 실제 사용한 물품, 복제 메달, 제복 등을 학교나 여러 기념관 등에서 제공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 국사경진대회 (National History Challenge)의 전쟁과 평화 부문 지원 - 중학교 3학년 대상 논문 및 수필경연 대회(Simpson 상)
미국	- 국외 현충일 (Remembrance day) 교육 - 추모배지(양귀비꽃) 착용, 화환 만들기, 묵념 등 추모방법 교육과 토론 활동 자료 공유(TPT 교사전용 학습자료 공유 사이트 활용) (예시) 프랑스 현충일의 역사, 의미에 대한 학습자료 배포 - 대상자 맞춤형 Veterans Day 교육 프로그램 - 교사 : 일선 학교에서 국립묘지를 활용한 교육진행 커리큘럼과 교육자료 배포 - 대학교 : 인근 지역 국립묘지에서 참전용사 역사·업적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

□ 외국의 기념행사

구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대한민국
핵심 가치	·개척·통합정신 ·링컨대통령 재취임 연설	·희생과 봉사에 대한 존경 (Canadian Remembers Program)	·개척정신동료애, 민관협력 선양사업 (Mateship -Saluting Their Service)	·국권회복(독립) ·국가수호(호국) ·민주발전(민주)
기념 행사	·현충일 (Memorial Day) 5월 마지막 월요일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7월 4일 ·제대군인의 날 (Veterans Day) 11월 11일	·양귀비의 날 (Poppy Day) 전사자 추모 11월 11일	·안작크데이 (ANZAC Day) 4월 25일 ·현충일 (Remembrance Day) 11월 11일	·3·1절, 광복절 ·3·8 및 3·15의거 ·임시정부 수립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현충일 ·6·25전쟁일 ·연평해전 ·순국선열의 날

□ 외국의 『보훈의 상징』

구 분	주 요 내 용
영 국 (Poppy Day)	-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이자 영국의 현충일인 11월 11일에 재향군인회가 주관하는 자선활동 - 전몰자 추모상징인 모조 양귀비꽃(Poppy)을 달고 이를 판매,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성금 마련 - 영국에서 시작, 호주 등 영연방으로 확산
프랑스	11월 11일 전쟁기념일을 기해 상이군인의 재활을 위하여 간호사들이 젊은 전몰자를 추모하는 프랑스 수레국화(Bleuet de France)를 판매하는 행사 실시
캐나다	2004년 노르망디 전투 60주년을 기념하여 참전용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새긴 기념배지를 배부하여 이들의 위훈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

전략목표 V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한다.

기 본 방 향

◇ 성과목표

- 성과목표 1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성과목표 2 : 참전기념사업 활성화 및 UN참전국 교류협력 강화로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한다.

◇ 그간의 성과

- 국민들이 공감하고 제대군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 마련
 -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제대군인 지원제도 개선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 우선지원 필요 의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시범사업 지속 실시
 -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등급미달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 제대군인주간 및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법제화('22.6.8.)
- 제대군인 맞춤형 교육훈련 및 일자리 발굴을 통한 취·창업지원 강화
 - 전국 10곳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로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 ▶ 취·창업지원 : ('19년) 7,014명 → ('20년) 6,894명 → ('21년) 7,007명
 - 전직목표 및 군 경력(특기, 교육, 보직) 등과 연계하여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 국가수호 희생자 추모행사를 정부주관으로 거행함으로써 희생자 및 참전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6·25중앙행사 및 위로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등을 통해 산업화·민주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조명

○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및 현지위로 행사를 통한 참전용사 예우

- ▶ '75년(한국전쟁 25주년)부터 현재까지 33,000여 명 초청
- ▶ 행사 참여자 만족도 ('19년) 98.6점 → ('20년) 98.8점 → ('21년) 99.1점

○ 유엔참전국과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

-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예우사업을 매개로 참전국과 교류 협력채널을 다양화하고, 참전용사 후손간 우호증진 강화
- 유엔참전용사 초청, 참전국 현지 위로 감사, 후손 장학사업 등을 통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임무와 전략목표간 상관성

-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와 취·창업 지원 기반 구축 등을 통한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체계 마련
- 국가수호 희생자 추모식 등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호국 의식 고취
-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 및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 및 보은 행사로 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국가이미지 제고

(1) 주요내용

□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이 사회적으로 존중 받는 방안 마련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취·창업 등 지원
- 전직지원금 단계적 인상 및 제대군인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

□ 참전용사 등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이 예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국가수호 희생자 추모행사를 정부주관으로 거행함으로써 희생자 및 참전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보훈외교 강화

- 유엔사 근무 예비역 장병 초청 재방한 행사 등 유엔참전용사 예우사업 강화
- 유엔참전국과의 미래세대 연계강화
- 범국민적·국제적인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제대군인지원센터 이용자 취·창업률(%)	-	-	63.5	64.5	65.4	65.4	최근 3년('19~'21년)간 연평균 증가율 1.4%를 고려하면 목표 치를 상향하여야 하나, 코로나 19의 여파 및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21년 실적과 동일한 65.4%를 목표로 설정	(제군센터의 전직 지원 서비스를 받은 취·창업 지원제대 군인수 ÷ 제대군인 센터 회원 수) x 100 (연도말기준)	내부 보고서 (명단 제출)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1	'22	'23	'24
V-1.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 추천도(점)	-	75.8	76.8	76.9	77.0
V-2. 행사참여자 만족도(점)	98.8	99.1	99.3	99.4	99.5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제대군인의 군복무 희생에 공감도가 낮고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
-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1999) 이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보상 및 지원 요구 증가
 - 보상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병역미필자(여성, 장애인 등)
와의 역차별 및 평등권 침해 등 이유로 갈등 예상
- 국방전직교육원과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일부
중복되어 전직지원체계 개선 필요

(1) 주요 내용

□ 제대군인 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체계 및 법적 근거 등을 마련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제대군인법」상 지원대상임을 명시
 - 의무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했거나, 일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취(창)업상담·알선 등 서비스 제공 신설
- 제대군인 정책 수립·추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근거 마련
 - 제대군인 대상 지자체 공영주차장·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부여 등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경력 산입 확대 및 의무화
 - 국가·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호봉뿐만 아니라 승진에도 군 경력을 반영하도록 「제대군인법」 제16조 개정 추진
- 군 복무를 사회봉사 등의 대학학점으로 인정 협조
 - 현재 서울대 등 24개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군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 중
- 의무복무 마친 제대군인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6개월 산입 제도를 18개월까지 확대하도록 추진(복지부 협조)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취·창업 등 지원 강화

-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및 취·창업 지원
 - 매년 전역하는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지속 발굴 및 선순환 관리

- 제대군인의 특기 및 적성을 고려한 취·창업 지원 및 알선으로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맞춤형 취·창업 지원
- 전직지원금 단계적 인상 및 대부지원 강화 등을 통한 생활안정지원
- 교육수요 및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내실화

○ 제대군인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

-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인 근접지원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 확충
※ '22년 10개소 → '27년 18개소
- 취업지원 전담 부서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 확대 및 고용복지+센터 인력 파견
- 유관 부처간 취업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 장기적으로 제대군인 지원 일원화를 위해 전담조직 설립 검토

□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 비연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 지원금을 구직급여(월 198만원)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지원 제도개선 추진
 -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한 주택 대부금액 한도액 인상

□ 단기복무(5년 미만) 장교·부사관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방안 마련

- 군의 허리인 우수 초급간부 자원 확보는 군 전력과 연계됨을 인식
※ 육군 소위 임관자의 약 73%가 ROTC 출신(육사 5%, 3사·국간사·학사 등 22%)
- 중기복무자 수준의 사회복귀 지원 실시로 초급간부 지원 장려
※ 국방부도 단기복무 장려금을 400 → 6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대책 마련 중

(2) 세부 추진계획

□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및 취·창업 지원

- 범정부적 협업으로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및 관리

- 범정부 협의체인 「제대군인지원협의회」 정례화를 통한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협업(10개 부처 및 민간위원, 분기 1회)
 - ※ (국방부.방사청) 군관련, (행안부) 비상계획관, (보훈처 등) 민간 일자리
- 우수 민간일자리 확대 및 연금 수급자 등의 보람형 사회적 일자리 지속 확보
- 기확보된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선순환 관리
-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및 알선
 - 제대군인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전직목표 설정 및 취·창업 지원(채용추천, 구인·구직행사, 동행면접 등)
 - 취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부사관, 대위·소령 등)에 대한 취·창업 지원을 강화

□ 제대군인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

-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인 근접지원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 확충(‘22년 10개소 → ’27년 18개소), 고용복지+센터 제대군인 전담 상담사 파견 등 업무역량 강화
- 제대군인 지원 종합 포털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프로세스 구축 및 최신 기술 적용을 통한 전직지원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제대군인 인적자료의 체계적 DB구축 및 부처 간 시스템 연계
 - 국방전직교육원, 고용부 워크넷을 통한 취업정보 연계 및 공유
- 제대군인 취업 전담조직인 제대군인 인력개발원 설립을 추진하고 제대군인 정책업무 담당조직 확대 추진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내실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 취득 및 전문교육 과정 발굴
 - 교육수요 및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과정 발굴·운영
- 전문교육 위탁과정을 보완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으로 직업 능력 강화

- 제대군인 사이버연수원을 통한 사이버교육 실시
 - 자격증 등 각종 과정을 통해 공간적 제약 없이 자율적 역량개발기회 제공
- 4차산업혁명 등 산업변화에 대응한 위탁교육·사이버교육 발굴 및 운영

□ 제대군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월 198만원)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상응하게 조정
 - (지급액) 중기 50, 장기 70만원 → 중·장기 99만원
 - (지급기간) 중·장기 6개월 → 중기 7개월, 장기 8개월
- 주택관련 대부 한도액 인상 추진
 - ※ 주택구입 : 특별광역시(6,000→8,000만원), 중소도시(4,000→5,500만원), 농어촌(3,000→4,000만원)
 - ※ 주택임차 : 특별광역시(4,000→5,200만원), 중소도시(2,500→3,300만원), 농어촌(1,500→2,000만원)
-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이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무료법률구조지원

□ 제대군인 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체계 및 법적 근거 등을 마련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제대군인법」 상 지원대상임을 명시
 - 의무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했거나, 일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취(창)업상담·알선 등 서비스 제공 신설
- 제대군인 정책 수립·추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추진
 -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근거 마련
 - 제대군인 대상 지자체 공영주차장·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부여 등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경력 산입 확대 및 의무화
 - 국가·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호봉뿐만 아니라 승진에도 군 경력을 반영하도록 「제대군인법」 제16조 개정

- 군 복무를 사회봉사 등의 대학학점으로 인정 추진 (교육부 협조)
 - 현재 서울대 등 24개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중
- 의무복무 마친 제대군인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6개월 산입 제도를 18개월까지 확대하도록 추진(복지부 협조)

□ 단기복무(5년 미만) 장교·부사관 사회복귀 지원 신설

-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 알선·상담 등
 - * 취업역량 향상에 필요한 학원수강료 등 지원(인당 150만원 한도)
 -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훈련 기관에서의 훈련비 지원(인당 120만원 한도)
- (전직지원금) 전역 후 실업상태인 경우 300만원(50만원×6개월) 지급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군 복무기간은 공적 업무를 수행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 경력을 승진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논란
 - * 군경력 호봉 반영 현황 : 100%(국가기관), 88.3%(공공기관), 43.7%(사기업체 등)
- 경기악화·코로나19 등으로 조기퇴직,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30~40대가 42.9%를 차지하고 있는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확보에 재원, 제도 등 고용 여건 마련 어려움
-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봉급 인상 등 처우개선에 따라 상대적으로 초급간부 복무여건이 열악해져 지원을 감소(서울대 등 일부 대학 미달)
 - '25년까지 현역병 봉급 200만원까지 인상 예정인바, 초급간부 우수자원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 등 예상 → 인센티브 마련 필요

· ROTC 경쟁률 : ('18) 3.4:1 → ('19년) 3.2:1 → ('20년) 2.7:1 → ('21년) 2.6:1
 · 부사관 경쟁률 : ('18) 3.6:1 → ('19년) 3.5:1 → ('20년) 2.9:1 → ('21년) 비공개

ROTC 현역병 복무기간 연혁	ROTC	28개월					
	현역병사	36	33	30	24	21	18
	차이(월)	-8	-5	-2	+4	+7	+10
		1968년	1981	1990	2003	2010	2020년

(4) 참고자료

□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 www.vnet.go.kr

□ 현역병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등 복무여건 비교

구분	신분	복무기간	복무내용	급여	감독기관	전역인원 (‘21년)
현역병	군인	18개월(육군) 18개월(해병) 20개월(해군) 21개월(공군)	국토방위	51만원 (이등병) ~ 67.6만원 (병장)	국방부	232,608명
단기복무 장교		ROTC 28개월 학사장교 등 3년		175.5만원 (소위 1호봉)		5,162명
단기복무 부사관		4년		170.5만원 (하사 1호봉)		7,307명
의무경찰	전환 복무자	18개월	치안유지	현역병과 동일	경찰청	6,941명
의무경찰 (해양)		20개월	해양안전		해양경찰청	967명
의무소방원		20개월	재난안전·구조		소방청	566명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21개월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지자체, 복지시설 등	34,868명

(1) 주요 내용

- 참전용사 예우사업을 통해 참전용사의 공헌에 대한 감사와 예우로 자긍심 고취 및 명예 선양
-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참전용사의 요청과 이를 바탕으로 참전국과의 교류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 참전기념사업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책임 강화

- 세대간 공감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참전기념행사’ 거행

- ◆ 제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3.25, 국립대전현충원, 250여명)
- ◆ 6·25전쟁 제72주년 행사(6.25, 장충체육관, 1,000여명) * 위로연(6.24, 신라호텔)
- ◆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7.27, 동대문디자인플라자, 1,000여명)
- ◆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11.11, 부산 유엔기념공원, 1,000여명)

- 전국적 계기행사 추진으로 추모와 기억, 감사의 공감릴레이 전개
 - 전적지 순례, 민간주관 참전기념행사, 참전유공자 위로연, 부산유엔위크 등
- ‘이달의 6·25전쟁영웅’ 명예 선양을 위한 맞춤형 홍보 등 국가책임 강화
 - 지역별 실정에 맞는 홍보활동 지원
 - 6·25전쟁 72주년 기념행사 계기, 선정패 증정식
 - ‘전쟁영웅 알리기 캠페인’ 영상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보훈외교 강화

- 유엔사 근무 예비역 장병 초청 재방한 행사 등 유엔참전용사 예우사업 강화
 - 재방한 대상을 미래세대로 확대, 유엔사 근무 예비역 장병 초청
 - ※ 유엔참전용사 고령화(평균 90세, 40여만명 생존 추정)로 사업 대상 확대 필요

- 저명인사, 참전국 정부 관계자 등 초청 범위 확대를 통해 참전국과의 지속적인 동맹 관계 강화
- 미국 최초로 '한국전·월남전 등에 참전한 동맹국 군인을 베테랑으로 예우'하는 주 법안을 통과시킨 조지아주 상·하원의원 초청
 - ※ 미국 내에서 모범사례로서 관련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초청
- 타국 배속 참전용사(멕시코 수리남,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및 가족을 초청하여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참전용사에게도 감사와 따뜻한 관심 표명
- 유엔참전용사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방문·참여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통한 온라인 재방한 병행
- 특별주기 계기 및 참전국 현지 위로행사 추진
 - 참전국과의 수교일 및 현지 정부 행사 등과 연계하여 정부대표단 파견, 행사의 의미를 제고하고 참전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 국방부 해군순항훈련단과 협업, 현지 위로·감사 오찬 추진
 - 유엔참전용사 신규 발굴 및 무공훈장 전달, 유족에게 감사 전달
- 한·미 전문가 세미나 개최를 통한 친한(親韓)세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
 - 한·미 전문가 세미나 개최로 양국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한미동맹재단(KUSAF) 및 美 주한미군전우회(KDVA)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
-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공훈발굴 및 명예선양 추진
 - 유엔참전용사 사망 시 예우 및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유엔참전용사 디지털 아카이브 인터뷰 한글자막 및 재정비를 통해 국내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 서비스 개시 등 접근성 향상 추진
 - 정부 주도의 유엔참전용사 공적발굴 및 포상으로 명예선양
- 유엔참전국과의 미래세대 연계강화
 -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과제』로 선정(21년)
 - 참전국 미래세대 국내초청 및 현지교류 캠프 등 미래세대간 교류사업에 대해 참여기준 완화 및 프로그램 다변화 등 확대 추진

-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 지원사업 지속 실시
- 보훈외교의 외연 확장을 위해 참전국 이외의 국가와도 교류 추진
- 참전국 등 외국정부와의 국제교류·협력 체계 구축 강화
 - 참전국과의 보훈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주한 대사관 공관장 및 참전국 파견 무관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보훈사업 설명회 개최
 - 보훈장관회의 정례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교류 협력 증진
- 범정부 협업을 통한 다양한 국제보훈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 나눔의료 사업과 연계하여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거주 독립유공자·유엔참전용사 후손을 발굴하여 의료 지원
- 범국민적·국제적인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 범정부적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념사업 개발
 - 참전국·국제기구 정상 초청,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여 보훈외교를 강화하고 22개 참전국과 미래협력 토대 마련
 -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추모를 전하면서 문화·산업·학문 등 국가역량을 결집하는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여 전세계가 공감하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발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불안정한 한반도 주변 상황하에 유엔참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지지세력 확보 필요
 - 6·25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 및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UN군 참전의 살아있는 증인인 생존 참전용사의 고령화(평균 90세)로 초청 대상의 다양화 등 참전용사 명예선양 사업 다변화 요구

전략목표 VI 정책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성과 목표

- 성과목표 1 :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한다.
- 성과목표 2 : 대·내외 소통과 협력으로 보훈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그간의 성과

- 보훈정책, 보훈대상자 보상·예우 및 보훈외교 강화를 위한 조직기반 확충
 - * 국립괴산('19)·제주호국원('21),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21), 제대군인센터('20), 정책총괄팀('20),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21)
- 단순·반복업무 자동화(RPA), 보훈데이터 표준·품질관리시스템 등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과학적 보훈 행정 및 일하는 방식 혁신
- 조직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문화의 날' 신설, 정책기획 및 실무역량 함양을 위한 직무역량 교육 강화
- 국민이 보훈정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소통 제작팀 구성, 'TV나라사랑'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운영 등 소통 창구 활성화

◇ 임무와 전략목표간 상관성

- 정책개발과 법제화, 예산확보, 조직기반 확충 등 정책기반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고 조직의 비전 및 전략 실현을 뒷받침

<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1	'22	'23	'24
VI-1. 행정관리역량 평가 점수(점)	83.54 (보통)	87.66 (우수)	85 (우수)	86 (우수)	87 (우수)
VI-2. 보훈실천 의향도(점)	-	-	55.4	55.6	55.8

(1) 주요 내용

□ 중점정책 이행 및 예산 관리로 일류보훈 기반을 구축

-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중점과제 등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정책 연구기능 강화
- 중점사업 예산확보 노력 및 집행률 관리를 통한 보훈정책 추진력 제고

□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연구용역 등 보훈업무 분석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
- 조직문화·일하는 방식 혁신 내재화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 유도
- 객관적·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으로 조직 목표 달성 극대화

□ 보훈제도 및 규제 혁신을 위한 체계적 법제·송무 지원

-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입법지원 효율화 추진
- 행정 쟁송 대응 지원 효율화 및 수행자 역량 제고

□ 정보시스템 활용 확대로 보훈행정의 효율 향상

- 법령 개정 등 제도 개편사항 시스템 반영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수준 향상으로 보훈데이터 분석·활용 확대
- 정형화된 단순·반복업무의 자동화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

□ 교육·복지 지원 강화로 조직성과 향상

- 직급별 역량모델 설정을 통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 언택트·세대변화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활기차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2) 세부 추진계획

□ 중점정책 이행 및 예산 관리로 일류보훈 기반을 구축

- 주기적 정책전략회의 개최 및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정책과제 실현
 - (점검 주기) 실·국장 회의체 분기별 5회 이상
 - 회의결과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과제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정책 연구 결과 적극 활용
- 차년도 및 중기 주요사업 예산의 전략적 확보 및 집행을 제고
 - (편성) 중기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 제출
 - 국정과제, 중기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 검토·조정 및 제출
 - 조정회의 등을 통한 관·국별 우선 추진 사업 선정
 - (심의 대응 및 확보) 중기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대응
 - 중점사업 예산의 필요성, 합리적 논거 등 사전 준비로 적극 대응
 - 기재부 대상 심의 수시 대응(3월~8월)
 - 국회(예정처, 정무위, 예결위), 의원 및 보좌진 대상 설명회(9~11월)
 - (집행)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를 위한 집행 점검 등 대응
 - 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한 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 대책 수립 추진

□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 조성

-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조직개편안 마련
 - (조직진단) 확대 및 축소분야 업무분석으로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 (탄력적 조직운영) 총액인건비, 유동정원제를 활용하여 새로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보강 등 유연한 조직운영
 - (연구용역) 보훈대상자 구조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보훈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 경계 없는 소통·협업 활성화로 조직문화·일하는 방식 개선
 - (조직문화) 혁신모임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처·차장 소속기관 현장 방문과 연계 세대·직급을 아우르는 소통의 장 마련

- (일하는 방식) 법원행정처 협업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업무 효율화, 기관관리 협업과제 발굴 등 협업 활성화로 업무성과 창출

○ 일상적 공직문화로 조직내 정부혁신·적극행정 정착

- (과제 선정·추진) 국정과제 등과 연계한 정부혁신·적극행정 분야 자체 과제 운영
- (인센티브 부여) 특별 승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유인

○ 효율적 평가기반 마련 및 정책에 대한 환류 활성화로 정책개선 기여

- (효율적 평가) 국정성과 창출 중심으로 정책성과-평가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평가와 보상을 연계하여 일 잘하는 분위기 조성

* 본부 및 소속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23년),
평가체계 개선·시행('24년)

- (환류 활성화) 자체평가위원,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개선 유도

□ 보훈제도 및 규제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송무 지원

○ (입법)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입법지원 효율화 추진

- 정부입법계획(법률) 및 하위법령 제때 마련 추진 지원
 - 새정부 국정과제 등을 반영한 정부입법계획 수립 추진 및 법령안 입안부터 각종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입법과정 적극 지원
-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 대응
 - 정무위 위원 등 관심법안 설명 및 사전 쟁점 조율, 법안소위 전 중점 처리법안 적극 설명 및 소위 안전 반영 등 추진

○ (송무) 행정 쟁송 대응 지원 효율화 및 수행자 역량 제고

- 조정제도 활용 등을 통한 행정쟁송 적극 지원
 - (행정심판) 수행청과 적극 협의하여 인용재결 예상 사건의 심리 단계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적극 소통 후 합의점 도출 노력

- (행정소송) 행정쟁송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검토 의견 제공 추진(상소 관련 의견, 추가 답변서 등)
- 송무워크숍 및 소송업무 교육을 통해 행정쟁송 수행자의 역량 강화

□ 정보시스템 활용 확대로 보훈행정의 효율 향상

○ 보훈행정 개선에 따른 정보서비스 적기 제공 및 사용편의성 제고

-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발급 체계 구축(행안부 협조), 위탁병원 감면 대상자 약제비 지원 등 유공자 편의 서비스 강화
- 보훈심사 신청자가 CD로 제출하는 의료영상정보를 복지부 진료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 편의성 제고
- 해외송금 지급관리, 보상금 지급액 변동자 확인 등 단순·반복업무 자동화(RPA) 구축 확대('21년 9개, '22년 5개 예정)

○ 통신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 '22.4Q 국가융합망 전환 및 통신품질 제고를 위해 업무망·인터넷망 재구성, 통신대역폭 확대, 주요 통신장비 이중화 추진
- 통신장애 예방,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 등을 위해 소속기관 사무실 통신장비 및 통신케이블 정비('22년 15개, '23년 26개 기관)

○ 보훈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 통합보훈, 안장관리, 제대군인 등 내부시스템 및 국토부, 통계청 등 외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포털 구축
- 교통카드 이용내역, 보훈인구 추계 등 빅데이터 분석 시범과제 수행
- 보훈처 내부 정보시스템의 표준 및 품질 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확한 보훈데이터 제공

○ 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 및 안전한 업무환경 확보

-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한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확립
- 주기적 취약점 진단 및 모의훈련을 추진하여 대응 역량 향상
-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원격 환경 구축

□ 교육·복지 지원 강화로 조직성과 향상

○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교육 지원 활성화

- 직급별 필요한 역량모델 설정을 통해 교육훈련 체계 구축
- 직무와 학습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무 분야별 교육 콘텐츠 활성화
- 직원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 신규공무원 조직 적응지원 교육 강화를 통해 공직가치 내재화
- 자발적 학습을 통한 몰입도 제고,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를 위해 비정형 학습의 상시학습 인정범위 확대

○ 미래변화 대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역량 교육 강화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디지털 문해력 향상 과정 등 신설 운영
-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정보화 역량 향상
- 메타버스(Metaverse), 하이브리드 러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교육 방식 접목한 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 동일한 교육과정을 일부는 집합, 일부는 이러닝으로 동시에 수강하는 교육 형태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복지 강화

- 직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통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확립
- 가족친화 지원제도 활성화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직원 인권보호 강화를 통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
- 열심히 일하는 직원 격려 및 복지지원 강화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정부 차원의 재정 집행 우선순위 과제와 우리 처 고유 과제의 우선순위 조정이 어려움
- 신규 정책 추진 시 전담인력 확충 등 조직 기반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 추진 동력 약화로 인한 성과 창출 제약

(1) 주요 내용

□ 전략적·체계적 홍보로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

- 정책별·대상별·계기별 맞춤형 기획홍보를 통해 우리 처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 및 공감대 형성
- 기관장 직접 홍보·현장 소통 강화 및 대·내외 홍보 협업 활성화

□ 적극적·예방적 감사 추진으로 기관 청렴도 제고

- 소극적 업무행태를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 활성화 추진
- 구조적·관행적 비위 등 취약분야 자체감사 강화를 통해 보훈행정 신뢰도 회복

(2) 세부 추진계획

□ 전략적·체계적 홍보로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

- 정책·대상·계기별 홍보계획 사전 수립, 체계적 홍보전략 마련
 - 주요 기념일, 주요 정책발표, 대국민 캠페인 등 주요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기획을 통해 전략적 홍보 추진
 - 일반국민/보훈대상자를 구별하여 차별화된 홍보전략 실시
 - * (일반국민)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 보훈에 관심을 기질 수 있도록 쉽고 친근한 콘텐츠 (보훈대상자) 보훈정책·이슈, 보훈단체 소식 등 보훈가족이 주로 원하는 콘텐츠
- 주요 정책에 대한 처·차장 직접 홍보 및 현장소통 강화
 - 중요 현안에 대한 장·차관 기고 및 인터뷰(신문 및 방송), 브리핑 등을 실시하여 정책홍보 및 '보훈을 통한 국민 통합' 강조

○ 대내·외 홍보협업을 통한 체계적·효과적 정책홍보 추진

- 정책홍보 TF회의, 일일점검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처 주간 행사 및 정책발표의 홍보계획과 홍보방안 협업
- 부처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협의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부처 간 홍보협업 활성화

□ 적극적·예방적 감사 추진으로 기관 청렴도 제고

○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등 적극행정 지원 활성화

- 사전컨설팅 제도 홍보 및 신청방법 간소화로 일선기관 적극 활용 유도
-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수감기관 의견 청취 의무화, 면책사례 공유

○ 소극적·관행적 업무행태 예방을 위한 현장소통 활성화

- 감사예정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방향·사례 등 공유 및 소통을 통한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실시
- 감사관계관 회의, 감사실무자 소통메모 등 일선기관과의 소통채널 다양화 및 소통기회 증대

○ 보훈행정 취약분야 자체감사 강화 노력

- 국회·언론·민원 등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분야 사전 감지, 자체 감사 및 개선방안 마련
- 불확실한 법령·규정 등으로 인한 과오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부서 제도개선 적극 권고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독립·호국·민주 국가유공자의 유형에 따라 지지하는 정책의 차이로 갈등 유발
- 업무추진 과정에서 법령, 지침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한 소극적·관행적 업무추진 행태 지속